



‘대한민국 100년’ 연속기획 1
3·1절 백주년 기념심포지엄

3·1혁명과 대한민국의 탄생

2019. 2. 21 **목** 오후 2시 30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제2강의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새100년위원회 준비위



좌장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기조 연설 ‘왜 3·1 혁명인가?’
윤경로 교수(한성대)

주제 발표 1) 민주공화국의 탄생

· 발제 : 전상숙 교수(광운대)
· 토론 : 이영록 교수(조선대)

2) 민주시민의 출현

· 발제 : 김정인 교수(춘천교대)
· 토론 : 이나미 교수(한서대)

3) 3·1정신과 평화

· 발제 : 신주백 교수(한림대)
· 토론 : 조성환 책임연구원(원불교사상연구원)

목 차

- **축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4

- **인사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6
 (한반도 새100년위원회 준비위원장)

-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8

- **좌장**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 **기조강연** ‘왜 3·1 혁명 인가?’
 윤경로 교수(한성대) 13

- 1) 민주공화국의 탄생
 - 발제: **전상숙** 교수(광운대) 23
 - 토론: **이영록** 교수(조선대) 33

- 2) 민주시민의 출현
 - 발제: **김정인** 교수(춘천교대) 37
 - 토론: **이나미** 교수(한서대) 53

- 3) 3·1 정신과 평화
 - 발제: **신주백** 교수(한림대) 59
 - 토론: **조성환** 책임연구원(원불교사상연구원) 69

축 · 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광온 최고위원님과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님, 기조연설과 토론에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올해는 3.1 혁명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현대사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100년 우리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남북 분단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확립시켰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도 GNI 3만 달러를 넘는 '3050클럽'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100년 전 3.1혁명과 임시정부 수립이 지향했던 가치들을 재정립하고, 새롭게 다가올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적 독립국가’, ‘자유롭고 균등하며 정의롭고 인도적인사회’, ‘평등하고 평화로운 국제 질서’ 등 제헌헌법이 지향했던 가치는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에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3.1혁명 정신을 계승하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의 가치를 정립시킨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조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혁명이라는 명칭을 대내외적으로 사용했으며, 1940년 이후 공식 문서에서도 3.1 혁명 혹은 3.1 대혁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3.1 혁명은 전 국민의 10분의 1이 넘는 2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군주제의 이념을 부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반을 쌓은 대혁명이었습니다. 이제 3.1 운동이 아닌 3.1 혁명으로의 정명(正名)이 필요합니다.

오욕의 일제 강점 하에서도 치열한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어 준 3.1 혁명의 경험과 기억, 그 가치를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위한 길에 펼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그 첫 걸음을 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 해 환.

인 · 사 · 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새백년위원회 준비위원장, 국회의원 박광온입니다.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초봄까지 1700만 명이 참여한 대한민국 촛불혁명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고루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열망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시민들의 함성은 성별과 세대, 계급과 계층을 뛰어 넘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반도 새100년위원회
준비위원장)

100년 전, 3월 1일에도 같은 경험があります. 1919년 3.1혁명은 남녀·빈부·종교·신분·지역에 상관없이 전 국민의 10분의 1을 넘는 220만 명 이상이 목숨을 걸고 참여해 대한민국을 태동시켰습니다. 3.1혁명의 경험과 정신은 일제강점기 내내 치열했던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3.1혁명의 성과는 ‘대한민국’의 수립입니다. 새 나라를 이끌어갈 주인은 3.1혁명에 참여한 국민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던 계기였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호를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인 ‘대한제국’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의미하는 ‘대한민국’으로 바꾸었습니다.

제헌헌법의 기본적 바탕이 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통해 개인과 개인의 균등 생활을 실현하는 ‘삼균주의’를 임시정부의 기본이념과 정책노선으로 확정하였습니다.

3.1혁명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성은 양극화의 심화와 적대적 남북 관계로 단절되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생산적복지,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투자국가,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국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3.1혁명의 경험과 정신, 가치를 다시금 바로 세우고 앞으로 펼쳐질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100년을 전쟁과 이념으로 갈린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이끌 것이며, 오늘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심포지엄 기조연설 맡아 주신 윤경로 교수님을 비롯하여 발제를 허락해 주신 전상숙 교수님과 김정인 교수님, 신주백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이영록 교수님, 이나미 교수님, 조성환 책임연구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한반도 새100년위원회 준비위원장) **박 광 온**

인 · 사 · 말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 원장 김민석입니다.

먼저 「3·1혁명과 대한민국의 탄생」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축사를 해 주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새100년 위원회 준비위원장 박광온 최고위원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오늘 토론회의 기초연설을 맡아 주신 윤경로 한성대 명예교수님, 발제를 해 주신 전상숙 광운대 교수님,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님, 신주백 한림대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주신 이영록 조선대 교수님, 이나미 한서대 교수님, 조성환 원불교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3·1운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민족의 진정한 광복과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위해 억압과 굴종을 깨고 떨쳐 일어선 그 힘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온 거대한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456’(3·1, 4·19, 5·18, 6·10)을 노래합니다.

올 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에게 3·1의 역사적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3·1운동이냐 3·1혁명이냐’ 하는 논쟁이 그것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한 사회의 정치, 사회, 사상적 근간을 변화시켰다면 그 사건을 혁명이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3·1을 혁명이 아니라 운동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의 거의 모든 식민지해방국가들이 자신들의 독립운동, 독립선언, 독립투쟁의 역사를 혁명으로 부르면서 국민들의 역사적 자긍심

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미국독립혁명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전 국민적 항쟁을 통해 군주제를 민주공화제로,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꾼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으며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사건을 혁명으로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회가 3·1의 역사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좋은 출발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역사를 잇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법입니다. 새로운 100년의 준비는 지난 백년의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새100년 위원회가 마련한 오늘 토론회는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선조들이 피와 눈물로 건설하려고 했던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과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2월 21일

민주연구원 원장 김 민 석

기조
강연

'왜 3·1혁명인가?'

윤경로 교수(한성대)



‘왜 혁명인가?’

- ‘3·1혁명’의 역사성과 3·1정신의 현재성 -

윤경로 교수(한성대)

1. 3·1운동은 민(民)이 주도한 ‘혁명’이다.

3·1운동 10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 역사적인 날을 앞두고 3·1운동을 ‘3·1혁명’으로 정명(正名)하자는 주장이 회자되고 있다.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지칭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3·1운동’이라는 역사용어에 매우 익숙해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학계를 중심으로 3·1운동을 ‘3·1혁명’으로 지칭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글에서는 ‘3·1혁명’으로 개칭하자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고자 한다.

그동안 3·1운동이라는 지칭에 별반 논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제헌헌법에서 현행 헌법까지 수차례 걸친 개정이 있었지만 헌법 전문(前文)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이라고 문구는 변한 적이 없다. 그만큼 권위를 인정받은 탓이라 할 것이다. ‘3·1운동’이란 명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곧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왈가왈부 하지 못했는지 모른다. 이를 문제로 삼으면 마치 헌법을 부인하는 ‘불경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을 법도 하다.

그러나 100년의 시간이 흐른 이즈음 그간 신성시해온 ‘3·1운동’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해볼 필요가 있다는 작금의 분위기이다. ‘3·1운동’이 지닌 역사적 무게를 생각할 때 그렇게 많았던 여러 ‘운동들’의 하나로 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 ‘3·1운동’을 비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면 생각이 달라진다. 일종의 역사인식의 변화라 하겠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3·1운동은 개항이후 타율적으로 진행된 왜곡된 근대화 과정을 바로세우기 위한 여러 형태의 수많은 세류(細流)들, 곧 여러 모양의 작은 물줄기들이 모이고 쌓여 1919년 3월 전 민족과, 전 계층이 함께하여 ‘큰 강’ 곧 대하(大河)를 이룬 대사건이라도 정의해왔다. 우리 역사학계에서 이 사건을 한국근대사와 현대사를 구분하는 시대구분의 분기점으로 삼는 것도 이러한 ‘3·1대사건’이 지닌 남다른 역사성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익히 아는데로 1919년 ‘3·1만세사건’의 사건당시 명칭은 ‘소요’ 혹은 ‘폭동’이었다. 마치 1894년 반제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쫓겨난 동학농민혁명을 과거 ‘동학난’이라 불렀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대 지배층 혹은 기득권층에서 볼 때 그것은 ‘폭동’이고 ‘난’이었다. ‘동학난’이라는 용어가 사건 당시는 물론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도 ‘난’으로 불렸음은 당시 역사인식이 그만큼 치자(治者)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역사적 용어로서의 ‘운동’이라는 용어가 함의하는 뜻은 ‘투쟁’, ‘항쟁’, ‘혁명’이라는 의미에 비해 역사성이 덜한 인상을 준다. 또한 우리는 지난 100여 년 간 ‘3·1운동’으로 불러왔기에 귀에도, 입에도, 눈에도 익숙한 것에 반해 ‘3·1혁명’이라는 용어는 생경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학은 해석학이다’라는 말이 있듯 지난 과거의 사실(事實, facts)은 변할 수 없지만 역사적 사실(史實, historical facts)에 대한 역사인식은 앞서 언급한 ‘동학난’이 ‘동학농민혁명’으로 그 의미와 해석이 달라지듯 시대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3·1운동’이라 지칭해 온 것을 ‘3·1혁명’으로 바꿔보자는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3·1운동’을 ‘3·1혁명’이라는 지칭해 온 선례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즉 해외 독립운동 단체와 독립운동가 진영에서는 일찍부터 ‘3·1혁명’이라 지칭했었다. 1920년대 말 1930년대까지는 ‘3·1운동’과 ‘3·1혁명’이라는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이후 보다 본격적인 독립전쟁과 혁명적 분위기가 전개되면서 ‘3·1운동’에 대한 인식도 더욱 고무되어 이후로는 이를 프랑스대혁명이나 미국의 독립운동에 비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혁명’이라는 인식이 넓게 확산되었다. 예컨대 1938년 중국 장사(長沙)에서 거행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관한 3·1절 기념식에서 그러했고, 같은 해 4월 〈조선민족전선〉 창간호 기사에도 ‘3·1대혁명’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1941년 임정 산하 한국광복군 기관지인 〈光復〉 1941년 2월 창간호에서도 3·1운동을 “1919년의 전민(全民) 대혁명”이라고 규정하는 등 이후 ‘대혁명’이라는 명칭을 자주 볼 수 있다. 1943년 6월 재 창간된 〈獨立新聞〉 창간호에서 “세계제1차대전 후에 한국에서는 위대한 3·1대혁명운동이 발생했다”는 요지의 창간사를 실었다. 그리고 이후 기사에서도 ‘3·1대혁명’이란 용어를 자주 볼 수 있다. 해방직전은 물론 1944년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서문에서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 일부를 옮기면 아래와 같다.

(전략) “우리 국가가 강도 일본에게 폐망된 뒤에 전 민족은 오매에도 국가의 독립을 갈망하였고 무수한 선열들은 피와 눈물로써 민족자유의 회복에 노력하여 삼일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추향에 순응하여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체 제도에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아울러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후략)

이상에서 보듯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3·1혁명’ 혹은 ‘3·1대혁명’으로 부르며 ‘운동성’ 보다는 ‘혁명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해방 직후에도 변함없이 사용되었다. 이승만과 김구 등의 연설에서도 ‘3·1혁명’ 혹은 ‘3·1대혁명’이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제헌헌법 제정을 위해 결성된 헌법기초위원회가 작성한 헌법초안 전문에도 “우리들 대한민국은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초안이 제헌의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3·1혁명’이 ‘3·1운동’으로 바뀌었다. ‘혁명이’라는 문구는 불가하다’고 주장한 한 의원(조국현)이 “일본에게 뺏겼든 그놈을 광구(廣求)하자는 운동인 만큼 ‘항쟁’이라 할지언정 혁명은 아니다”라고 하며 반대 발언을 하자 당시 의장으로 사회를 보던 이승만이 “내가 절대 찬성합니다”고 손을 들어주었다. 이승만 본인도 이전까지 ‘3·1혁명’ 용어를 즐겨 썼고 초안에도 동조했던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이후에도 이 문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평소 ‘3·1운동론’을 지지해온 한민당 주장대로 ‘3·1혁명’이 ‘3·1운동’으로 최종 수정 통과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우여곡절을 거쳐 ‘소요’에서 ‘운동’으로 다시 ‘혁명’으로 그리고 다시 ‘운동’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로서 ‘헌법적 권위’를 갖게 된 ‘3·1운동’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수차례 걸친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성역화 되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용어 채택은 매우 중요하다. 엄혹하고 치열했던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3·1운동’이 지닌 역사성은 ‘운동’ 차원을 훨씬 넘는 ‘혁명성’이 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민족내부의 기존체제를 전복한 ‘혁명’은 아니지만 누천년 내려오던 봉건왕조의 ‘제국(帝國)’에서 백성이 주인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대한민국(大韓民國)을 세운 역사적 단초를 제공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3·1혁명’이라 지칭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한 사례로 중국의 경우 1911년 신해년(辛亥年)에 쑨원(孫文)을 중심으로 중화민국(中華民國)이 탄생했다. 즉 여러 천 년간의 봉건왕조를 마감하고 1911년 민국(民國)을 탄생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신해혁명’으로 역사화했다. 다시 말해 고래로부터 내려오던 봉건왕조와 왕권을 종식시키고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중화민국이 탄생되었기에 이를 기리어 ‘신해혁명’이라 지칭한 것이다. 이점에 주목할 때 중국의 신해혁명과 우리의 ‘3·1혁명’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중국은 혁명이라 하는데 우리는 왜 ‘운동’이라 하는가. ‘3·1혁명’이라는 큰 강(大河)을 이루기까지 있었던 그 많은 잔물줄기(細流)를 지칭하는 ‘운동’으로 지칭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다 하겠다.

2. ‘3·1혁명’의 이념과 정신

3·1혁명의 이념과 정신은 〈3·1독립선언서〉 내용 속에 잘 담겨있다. 이를 요약 정리하자면 첫째 自主獨立 정신이다. 〈3·1독립선언서〉첫 대목은 “吾等은 茲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로 시작된다. 이에서 보듯 3·1혁명이 추구한 이념과 정신의 첫 대

목은 ‘자주와 독립’이었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 한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자손만대에 알리며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려했다. 이같은 자주독립정신은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남북으로 나라가 양단되어 70여 년이 흐른 분단시대를 극복 못한 현실을 직시할 때 자주독립의 3·1정신과 이념은 향후에도 우리민족이 계승해야 할 절대가치다.

둘째는 自由民主 정신이다. 〈3·1독립선언서〉에는 밖으로부터의 자주적인 독립권의 회복이라는 외적인 목적에 이어 안으로는 우리 조선민의 ‘恒久如一한 自由發展을 爲함’과 ‘오직 自由的인 精神을 發揮할 것’을 천명했다. 이렇듯 자주독립국을 세우려는 근본목적은 “조선인이 본래부터 지켜온 자유권을 지켜 왕성한 삶의 즐거움을 누리려한다”(我의 固有한 自由權을 護全하여 生旺의 樂을 飽享할 것)는, 다시 말해 ‘自主民’ 곧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념을 제일의 정신으로 삼고 있다. 결국 자주독립된 나라를 세우려한 근본목적과 취지는 자주독립된 나라의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보장받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사회, 곧 主權在民의 민주주의 국가건설을 지향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자주독립된 나라 수립은 자유민주사회 건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나라의 주인인 백성(民)들의 자유와 민주정신을 담보하지 않는 자주독립국가 건설만으로는 3·1정신의 완성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정신’은 3·1정신이 우리에게 준 더없이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자, 기리 계승해야 할 또 하나의 가치가 아닐 수 없다.

셋째 人類共榮의 平和정신이다. 〈3·1독립선언서〉에 “조선의 독립은 조선만이 아니라 일본이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중국 또한 몽매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동양평화로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에 필요한 계단(階段)’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풀어 말하면 일본이 침략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향후 한·중·일 3국이 동양평화를 이룰 때 세계평화와 인류행복, 곧 인류공영의 평화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힘주어 강조했다. 이같은 〈3·1독립선언서〉에 담겨있는 동양평화와 세계평화 및 인류공영의 평화정신은 1909년 이토(伊藤博文) 저격을 결행한 안중근(安重根) 의사가 제창한 ‘동양평화론’을 재삼 떠올리게 한다. 그는 동양3국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복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안의사가 제안한 ‘3국 평화안’은 현재 유럽연합국(EU)에서 거의 유사하게 현실화되었다. 작금 여러 과거사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한·중·일 3국간의 역학관계를 유념할 때 매우 주목할 만한 제안이자, 정신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민족의 명운이 달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3·1정신의 주요 덕목 중의 하나인 인류공영과 평화정신을 3국간에 공유하며 체화하고 실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넷째 우리민족이 나아갈 꿈과 비전(Vision)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아아 新天地가 眼前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去하고 도의의 시대가 來하도다.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

사에 投射하기 始하도다”에 잘 나타나있듯 <3·1독립선언서>에 담긴 또 하나의 3·1정신은 우리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희망과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제 이후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음침한 옛집(古巢)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欣快한 復活’의 빛을 향해 힘차게 나가자”는 희망찬 비전 제시는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꿈과 비전이 아닐 수 없다.

3·1혁명이 ‘민(民)을 중심한 혁명’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민족대표 33인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언급하고자 한다. 언제부터인가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매우 비판적이며 폄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민족대표들이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선언하는 엄중한 자리에서 술판을 벌렸느니 태화관 여주인과 시비를 벌렸느니 더 나아가 이들 대표 중 대부분이 변절을 했다는 등 역사적 사실 아닌 낭설이 퍼졌다. 물론 33인 중 두서너 사람이 훗날 변절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점만으로 민족대표 전체를 싸잡아 추태를 버렸다든지 변절자로 폄하, 매도해서는 안된다. 이는 실제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엄혹한 상황에서 3·1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한 분들을 욕보이는 것이며 더 나아가 3·1정신을 흐리게 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는 역사 ‘자해행위’라 하겠다.

익히 아는대로 민족대표 33인은 예외없이 종교인들이었다. 당대 최고의 교세를 떨치던 민족종교인 천도교계 15인, 기독교계 16인 그리고 불교계 2인으로 결성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바는 이들 민족대표 33인은 누가 시켜서 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임하여 민족대표로 나선 분들이었다. 3·1거사 초기 준비단계에서는 본래 민족대표로 당대 지명도가 높고 과거 고관대작을 했던 유명인사들, 예컨대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등으로 명성이 높았던 개화파 인물 박영효(朴泳孝), 구한말 대신 출신인 한규설(韓圭畵), 윤웅렬(尹雄烈) 당대 최고의 개화 지식인으로 지명도가 높았던 윤치호(尹致昊), 심지어 이완용(李完用)도 거론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민족대표 자리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결국 종교인들이 나서게 되었다. 당시 이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지체가 높지도, 명성도 별반 없던 종교인 인사들에 불과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는 바는 이들 33인이 예외 없이 모두 평민출신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33인을 종교계 인사라는 점에만 주목해왔는데 3·1거사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을, 운동을 넘어 ‘혁명’으로 역사화 한다는 점과 연관시켜 볼 때 민족대표 33인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분이 평민, 서민출신이라는 점은 주목할 일이다. 천도교 교령 출신인 손병희를 비롯한 권동진, 오세창 등과 기독교계의 이승훈, 길선주, 양전백 등 그리고 불교계의 백용성, 한용운 등 33인은 예외없이 평민 출신들이었다. 3·1거사 후 40여 일 만에 나라의 주권과 국권이 일반백성 곧 평민에게 있는 나라 곧 주권재민의 대한민국을 탄생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이렇듯 민족대표 33인이 평민출신이었다는 점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점이다.

이밖에도 3·1운동을 혁명으로 볼만한 역사적 요인으로는 1919년 4월 10일 상해 출범한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에서 헌법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날 초대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의원들이 다음날 아침까지 꼬박 하룻밤을 새워가며 국호(國號)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憲法)을 제정한 후 정부 수반을 선출하여 임정을 수립하였다. 지난 해(2018)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1919년 4월 11일로 정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이 날 임정, 임시의정원에서 결정한 <임시헌장 및 임시헌법 10조개 조항>을 결정하였는데 이 중 ‘3·1혁명’과 관련된 조항을 소개한다.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1조), “대한민국의 人民은 男女, 貴賤 및 貧富의 階級이 없고 一體 平等함”(3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서의 公民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고 피선거권이 있음”(5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폐함”, “임시정부는 國土回復 후 만 1년 내 國會를 소집함”(10조) 등 꼽을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을 요약 정리해보자.

첫째, 3·1혁명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민주공화정을 잉태시켰다. 이로써 봉건적 왕조시대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으니 이후 복벽파(復辟派)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帝國’에서 ‘民國’으로, ‘臣民’에서 ‘民人’이 나라의 주권자로 우뚝 선 혁명적 변화가 있었다.

둘째, 처음으로 女性들이 사회변혁의 전면에 나선 사실 또한 혁명적 변화였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다는 일념에 남녀노유가 차이가 있을 까닭이 없었겠으나, 여성들이 대거 현실참여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이전 시기에 비할 때 획기적 국면전환이 자, 역사발전이 아닐 수 없었다. 셋째, 기생, 해녀, 백정, 광부 등 봉건사회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분적 차별을 받던 계층이 역사전환의 주체적로 떠올랐던 점 또한 혁명적 변화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이에 맞선 주력이 민중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천민으로 취급받던 이들이 만세시위에 적극 참여함으로 당당한 역사의 주인으로 떠올랐다.

넷째, 3·1혁명 이후 전면적인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었었다. 3·1혁명을 계기로 식민지 조선의 수다한 젊은이들이 국경을 넘어 신흥무관학교와(新興武官學校) 같은 독립군양성학교가 생겨났다. 이들은 봉오동전투(鳳梧洞戰鬪)와 청산리대첩(靑山里大捷)으로 상징되는 독립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전사들이 양성 독립전쟁에 나섰다. 다섯째, 좌우세력이 통합하여 민족협동전선(民族協同戰線)을 구축하였다. 초기 임정이 그러하였으며 이후 부침이 있었으나 이러한 통합 지향은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지속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좌우통합, 통일국가 수립의 여망으로 맥을 이어나갔다. 여섯째, 제국주의 지배하에 신음하던 피압박 민족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중국 신해혁명의 주역 쑨원(孫文)이 독립선언에 이은 만세시위를 ‘혁명’이라 평가하였으며,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R. Tagore) 또한 조선을 가리켜 ‘東方의 등불’이라 칭송한 것도 이 시기였다.

요컨대 3·1혁명과 3·1정신은 민족이 당면했던 자주독립의 목표를 넘어 자유 민주 평등이

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몸으로 실천한 혁명적 대 사건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성격을 반제국주의 민족혁명인 동시에 반봉건적 민주혁명이라 규정할 수 있다 하겠다. 더욱이 3·1항쟁이 배태한 이러한 혁명성이 앞서 보듯 대한민국임시헌장과 정강정책으로 승화되었으니 이는 선언적 차원을 넘는 혁명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17-8년 겨울 ‘촛불’들이 외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함성은 기실 그 원천을 3·1정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재확인한 큰 울림이었다 할 것이다. ‘촛불혁명’과 ‘3·1혁명’ 사이에는 100년이라는 시차가 존재하지만 이야말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가 일찍이 적시한 ‘역사의 동시성’이라할 것이다. 그런데

이쯤에서 사족 같지만 정치권에 부탁드립니다. 3·1운동을 ‘혁명’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하는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일체 ‘간섭’하지 않았으면 한다. 역사문제를 정치화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엄중한 역사문제를 정치권에서 논하는 것은 전근대 봉건사회에서나 있었던 일이다. 뿐만 아니다. 가까이는 지난 정권하에서 있었던 ‘建國節’ 논쟁의 ‘악몽’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역사문제는 이 분야 전문가들에게 맡겨 주고 정치권은 산적한 정치, 사회, 경제적 현안들을 풀어가는데 진력하고 역사문제는 역사학계에 맡겨주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3. 3·1정신의 계승과 ‘3·1혁명’의 현재성

작금 우리 한반도의 급변하는 상황은 100전 <3·1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음침한 옛집에서 뛰쳐나와 혼쾌한 부활의 빛을 향해 힘차게 나가자”는 그 대목처럼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만한 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1년 전만 해도 상상 할 수 없었던 변화이다. 물론 앞으로는 넘어야 할 산과 벽이 높고 두텁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 변화의 물줄기는 결코 누구도 되돌리지 못할 것이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지난 70년간의 독립과 반목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을 넘어 평화의 한반도, 하나 되는 그날을 향한 희망찬 행보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할 때 비로소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자주독립, 자유민주 그리고 인류공영의 평화를 지향했던 100년 전 우리 민이 추구했던 <3·1독립정신>이 비로소 성취될 것이라 굳게 믿는 바이다.

지난해 4월과 9월 남북정상 간의 역사적 만남이 있었다. 그리고 정상 간에 합의된 선언문 내용 중에는 내년 기념비적인 3·1운동 100주년기념행사를 남북이 함께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70년간의 정치적 이념적 분단으로 남북 사이의 역사이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사실이다. 100주년 공동행사를 통해 우리민족이 하나임을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간 남북 사이 역사이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로 확인하며 분단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의 역사인식을 만들어가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으

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그간 북쪽의 3·1운동사에 대한 남한 쪽의 이해 또한 매우 열악했다. 한 예로 그동안 1919년 3월 1일 당일 날 만세시위가 일어난 곳은 서울과 평양 정도로 전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3월 1일 당일 날 북쪽에서는 평양을 비롯한 진남포, 선천, 의주, 안주, 그리고 원산 등 6개 곳에서 시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다시 말해 남쪽에서는 3월 1일의 만세시위는 서울과 서울 근교인 고양 두 곳 뿐이었는데 북쪽에서는 당일 날 시위가 6곳에서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남북 역사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런 문제 등을 함께 토론하고 연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능라도 5·1체육관에 모인 15만명의 평양시민들 앞에서 “남북이 지난 70년간을 떨어져 살았지만 우리민족은 5천년을 함께한 하나의 민족”임을 힘주어 강조함으로 큰 울림을 주었다. “通卽不痛이요, 不通卽痛이라”는 고사가 있다. 지난 70여 년 간의 남북 간의 不通으로 얼마나 많은 苦痛이 있었는가. 이제 앞으로 서로 교류, 왕래 즉 상호 通하다보면 그간의 쌓여왔던 남북 사이의 苦痛이 눈 녹듯 녹아내릴 것이다. 바라기는 ‘3·1혁명’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국내는 물론 남북 사이에도 이 역사적이며 뜻 깊은 100주년을 맞아 남북정부가 함께하는 공동행사가 꼭 성사되었으면 한다. 중국 고사의 한 대목인 ‘만절필동’(萬折必東)이란 구절이 떠오른다. 중국 황하의 물줄기가 수만 번 굴절을 하지만 중국에는 동쪽 황해로 흐른다는 뜻이다. 남북문제를 놓고 그동안 ‘千折’, ‘萬折’의 우여곡절이 있었고 앞으로도 없지 않겠지만 중국에는 분단의 굴절과 아픔을 넘어 민족 통일의 꿈이 실현 되는 날이 기필코 도래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기대한다. 끝까지 경청해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

발제

1) 민주공화국의 탄생

발제 전상숙 교수(광운대)

토론 이영록 교수(조선대)



3·1과 민주공화국의 탄생: 현재적 의미 제고

전상숙 교수(광운대)

1. 시작하며

현대 한국 사회에서, 근대적인 지향과 전근대적인 관습이 착종되어 변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국가 주권이 상실되었던 식민지시기는, 정치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고 학문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채 한일 간의 역사갈등과 우리 사회 이념갈등의 기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식민지화 이전 곧 국가가 존재했던 개항 전후 시기와 해방이후 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전근대의 전통과 근(현)대의 한국 사회와 국가를 비교하거나 양 시기를 대칭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와 국가의 연속과 변용이 논의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논의에서 국가 주권이 부재했던 식민지시기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생략되곤 한다. 개항이후 일본의 한국 ‘병합(併合)’ 이전 구한말 시기도 자주적 근대화의 노력이 시작된 특수한 또는 주목해야 할 시기로서 그 전후 시기와의 연속과 변용의 관점에서 논의되면서도 일본의 병합으로 단절되고 만 ‘비극의 역사’로 정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사에서 식민지시기는 식민지시기에 국한해서 논하거나 연구할 때만 한국인의 역사 속에서 재현되는 한국근·현대사에서 섬 같은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 주권을 박탈당한 식민지시기는, 구한말과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현재 곧 한국의 근대와 전근대의 역사적 과정에 위치하며 자주적 근대화의 노력이 타율적으로 단절된 가운데 수동적 또는 타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사회의 근대화가 전개된 시기였고, 식민지 ‘조선’은 그 시기를 살아낸 한국인의 생활공간이었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시기는 현대 한국인과 한국사회의 전사(前史)이자 개항이후 전개된 한국인의 자주적 근대화의 노력이 ‘식민지적’으로 변용되고 변용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현재의 연속성 속에서 존재한다.

일본의 한국 ‘병합’은, 한국병합안을 작성한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 구라치(倉知鐵吉)의 술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식민지화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의 ‘병합’은 “한국이 완전히 폐멸(廢滅)하여 제국(帝國) 영토의 일부가 된다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당시 사용되

지 않던 새로운 용어를 찾아내 활용한 것이었다.¹⁾ 병합 직후 일본이 조선지배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일시동인(一視同仁)’을 표방하며 이른바 동화주의(同化主義) 정책을 실시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그와 같은 민족말살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었다. 개항 이후 자주적 근대화를 추구했던 한국 사회의 모든 노력을 부정하며 한국인을 일본인화하고 한반도를 일본 ‘국가’화 하고자 한 것이었다. 일본의 한국 ‘병합’과 일시동인의 식민지배정책은 한국의 일본 국가화(일본 국가의 한 지역으로의 포섭)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1910년대 일시동인으로부터 1920년대의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 1930년대의 내선융화(內鮮融和)에서 내선일체(內鮮一體)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일본의 국가와 국민 의식을 수용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제하고 그 강제를 강화해갔다.

그러므로 일본 제국주의 지배 아래 항일 독립운동은,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병합으로 단절된 국가 주권을 회복하여, 자주적인 근대 국가 주권으로 확립하고 근대적인 국가체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항일독립운동의 근대 국가 건설 구상은 일본의 식민지배하에서 러시아혁명 이후 전개된 세계 사조의 영향을 받으며 자유주의적 근대 국가 건설 구상과 공산주의적 근대 국가 건설 구상으로 크게 양분되어 전개되었다. 그런데, 항일독립운동 선상에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로 이념적으로 분화된 독립 국가 구상은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함께 전개된 조선식민지배정책의 대내외적인 필요에 의해서 강화된 일본 제국주의의 자본주의적 친일 세력 회유정책과 반공정책(反共政策)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자본주의적 친일 세력 회유정책과 이해를 같이 한 한인 세력과, 그에 대한 저항과 비판을 반제국주의·공산주의에 의거하여 전개한 한인 세력 간의 반목이, 일본 제국주의 지배 아래서 항일민족독립운동 선상의 이념적 분화와 맞물리며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한민족이 해방을 맞이하게 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국제적 냉전 및 국내적 분단 상황과 맞물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이념적 반목/갈등 현상과 연계되었다. 그 결과 현대 한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 아래 친일과 항일, 미군정기의 친미, 그리고 반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식민지 유산의 일부로써 오늘 우리 사회에 투영되게 되었다.²⁾

1) 倉知鐵吉(1939), 『倉知鐵吉氏述韓國併合ノ經緯』, 外務省調査部第四課, pp.11~12.

2) 이에 대하여는 전상숙(2011), “친미와 반미의 이념갈등 : ‘반미’를 통해 본 이념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구조”, 『동양정치사상사』 10-1 참조.

2. 식민지시 국가와 ‘조선(朝鮮)’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항하여 조선인들은 민족적 저항의지를 결집해 저항하며 독립된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국가 주권을 상실했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 시기 ‘국가’라는 용어는, 그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현실의 한국 국가 주권을 강탈해 장악하고 있는 국제법 상의 국가 일본을 칭하기도 하고 그 치하에서 조선인들이 염원하는 독립된 한민족의 국가 또는 한민족이 지향하는 독립된 근대 국가를 지칭하기도 하는 상반된 의미의 이중성을 갖는 것이었다.

‘병합’으로 국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국제관계에서 대한제국은 소멸하고 ‘국가’라는 용어는 대외적 공식적으로는 식민 모국을 의미하는 국가, 일본, ‘일본제국(帝國)’을 의미하게 되었다. 대한제국을 병합한 일본은 ‘한국’을 스스로 ‘제국’임을 자임한 ‘일본제국’의 한 지역 ‘조선’으로 불렀다. 일본국가의 지역명이 된 ‘조선’이라는 명칭은, 근대 국가체제로의 개혁을 주창한 대한제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일본 국가의 지역사로 흡수, 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조선’이나 ‘한국’이라는 명칭은, 식민지 한국인들에게 항일민족독립운동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고 정립해야 할 한(韓)민족의 역사를 간직한 국가나 근대적으로 개혁된 국가를 지향하고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그 결과 식민지시기 ‘국가’라는 용어는 한국인들에게 공식적인 용도와 비공식 또는 사적인 용도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와 지향이 다르게 사용되었다.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도 하는 모호한 이중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라는 용어가 칭하는 대상과 의미의 이중성은, 중일전쟁 이후 내선일체(內鮮一體)를 표방한 일본이 한국인에 대하여 일본제국의 국가 의식을 더욱 강하게 강요하면서 극대화되었다. 또한 한편에서 조선인들이 생존을 위하여 현실적이고 절충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면서 그에 비판적인 비타협적인 민족적 저항 의지와 대립되어, 지배와 피지배의 한일 민족간의 민족문제와 더불어서 조선 민족 내부의 민족적 갈등과도 착종되었다.³⁾ 식민지시기 국가라는 용어가 갖는 모호한 이중성은 식민모국 ‘일본제국’의 식민지배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와 직결된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이었다.

개항 이후 발아되기 시작한 한국의 근대 국가에 대한 인식은 병합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 대한 민족의식의 각성 및 이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의식과 입장 또는 태도

3) 만주사변 이후 중일전쟁을 거치며 격화된 일본의 내선일체 시책은 식민지 국가의 중의성조차 허용하지 않는 단일한 일본 국가와 국민 의식을 강제했다. 이는 1925년 치안유지법 실시 이후 항일 운동가들에게 정책적으로 시행했던 ‘전향’의 내용이 강화돼간 것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한 시책의 변화와 함께 식민지 조선인과 일본인 간에는 물론 조선인 간의 민족문제 또한 분화 갈등적으로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상숙(2005), “일제 파시즘기 사상통제정책과 전향”, 『한국정치학회보』 39-3, pp.195~212 참조.

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구체화되며 내면화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병합 이전 발아되기 시작한 근대 국가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내면화되기 시작한 식민지시기 ‘국가’라는 용어와 관념이 갖는 이중성은 민족문제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 필요는 중층적으로 착종된 ‘국가’ 인식의 이중성과 ‘민족문제’ 인식의 이중성이, 독립의 방법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직결되어 독립 이후 수립하고자 한 근대 국가관의 분열, 대립으로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한국의 자주적인 근대적 개혁을 좌절시킨 일본의 병합은, 한국인이 근대적인 국가관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일본 국가관의 이식을 강제하는 조선식민지배정책과 이에 대항하는 조선인의 민족의식, 그리고 독립 이후의 근대국가관이 현실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착종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하여 조선인들은 항일 독립운동 과정에서 분화된 민족문제 인식과 그와 결부되어 형성·분화된 독립 이후 근대국가관을 가지고 종전과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화된 민족문제 인식과 근대국가관은 해방 이후에도 세계사적인 냉전과 민족적 분단이라는 정치적 현실의 제약과 맞물려 결과적으로 그 해소를 위한 통합적인 모색이 제한됨으로써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어 한국 사회 갈등의 주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3. 3·1운동과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

제1차 세계대전은 반전(反戰)사상과, 제국주의 전쟁으로 전개된 서양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확산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된 약소민족과 식민지 국가에서 반제국주의 저항 민족의식이 촉진되어 반제국주의 민족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서, 세계대전 중에 발발한 러시아혁명의 성공은 러시아혁명정부의 민족자결선언의 결과 그에 잇따른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을 낳았다. 그리하여 세계대전 중에 발화된 식민지 약소민족 자결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 결과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전개된 자본주의적 근대 문명을 비판하는 ‘개조(改造)’론이 확산되고 식민지·약소민족 국가에서는 반제국주의 민족자결운동이 발흥했다.

이러한 제1차 세계대전 전후 국제정세의 변화는 일본 제국주의의 병합 이후 억압되었던 조선인들이 세계 개조의 분위기를 접하며 항일 민족 독립 의지를 거족적으로 분출시키는 배경이 되었다.⁴⁾ 세계적인 개조의 사조와 미·소의 민족자결선언은 10여 년에 걸친 일본 제국주의의 무단통치 아래서 숨죽이고 있던 조선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하여 민족의 자결과 독립을 선언하며 거족적으로 항거하는 주요 동인이 되었다. 비록 3·1독립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국제 사회는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제국주의의 무단통치에 대한을 비판을 불러일으켰

4) 전상숙,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 민족 지도자들의 대외 인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1, 2004b, pp.313~341.

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의 무단통치가 이른바 ‘문화정치’로 전환되는 소기의 성과뿐만 아니라 민족독립의 염원을 대표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이루었다.

3·1운동은, 병합 이후 일본 제국주의 지배 아래서 민족해방운동의 발현점이 되었다. 민족이 독립운동의 주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그것이 지식인뿐만 아니라 대중 차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정착되는 전환점이 되었다.⁵⁾ 또한 각성된 민족적 독립운동의 주체의식과 독립의지는, 민족의 독립을 정치적으로 실현할 정부기구의 수립으로 이어져서, 전 민족적인 항일 민족 독립 국가 건설의 열망을 담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게 했다.⁶⁾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국 민족의 자주적인 근대 국민국가에 대한 지향과 한국인의 평등한 자유와 주권 실현의 소망이 투영되어 근대적인 한국 국민국가를 전망하며 수립된 것이었다. 병합 전후 자각되기 시작한 민족의식과 민족주의에 기초한 근대 국민국가에 대한 지향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통해서 주권재민, 인민주권의 공화주의로 천명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민주공화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통해서 한국인의 근대 국가관으로 정립된 것이었다.⁷⁾

세계사적으로 전제군주제가 청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아래 있던 조선에서도 전제군주제를 청산하고 인민주권의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통해서 구축되고 민족해방운동이 본격적으로 발흥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3·1운동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지만, 식민 지배 아래서 억압되었던 조선인의 저항적 민족의식을 결집해 민족 독립을 위한 민족주의운동이 전개되며 주권재민하고 인민 평등한 민주공화정을 독립 이후 건설할 국민국가 형태로 귀일하게 하는 결실을 맺었다.

그런데, 1919년 민족적 항거로 변화된 문화정치로 제한적이거나 허용된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공간에서 1920년을 전후하여 분분했던 ‘개조(改造)’의 물결에는 공화정의 독립된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의 지향 속에 내포되어 있던 이념적 균열이 발아될 단초가 내재되어 있었다. 3·1운동 이후 붓물 터진듯이 유입된 이른바 ‘개조’의 다양한 흐름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발흥한 자본주의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적 사조들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물질문명에 대한 개조, ‘개조론’의 붐을 야기했다. 그 기본 인식은 첨단 근대 문물의 충돌로 전개된 ‘세계대전’을 문제시하여 자본주의 문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에 동원된 식민지국가와 약소 민족들에서 고양되기 시작한 반제국주의 민족독립운동과 민족자결의식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 제국주의국가 내에서 확산된

5) 박찬승, 『민족·민족주의』, 소하, 2010, pp.91~93.

6) 전상숙, “세계대전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활동의 현재적 고찰”, 고정휴 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 나남, 2010, p.437; 전상숙, 『한국 근대 민족주의와 변혁이론, 민주공화주의』, 신서원, 2018.

7) 전상숙, 『한국인의 근대 국가관, ‘민주공화국’ 재고』, 선인, 2017.

반전운동의 고양이라는 세계적인 반제국주의 정서가 배경이 되었다. 세계적으로 확산된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비판과 반제국주의 정서는 베르사이유조약이 체결되고 패전국 협상이 종료된 1921년을 전후로 하여 총칭 ‘개조론’으로 뚜렷한 경향성을 띠며 확산되었다.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개조론’은, 자본주의의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하면서 개인적·정신적인 개조를 바탕으로 한 ‘문화주의’와 물질적인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개조론’으로 대별되어갔다. 그러한 개조론의 사조는, 일제의 변화된 문화정치로 활성화 된 사회적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논의되며 사회운동과 연계되었다. 그리하여 전자는 자치론으로 후자는 공산주의나 무정부주의와 결합되며 전개되었다.

4. 임시정부 수립으로 정립된 민주공화국, 독립 대한민국 국가 이상

3·1운동을 직접적인 동인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통해서 전 민족적 합일체로서 제시된 근대적인 독립 민족 국가의 상은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민주공화국’이었다. 전통적인 왕도, 지배세력도 아닌 일반 민중인 ‘민(民)’이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는 주권(主權) ‘을 갖는 공화(共和) 정치를 시행하는 국가가, 개국 이래 점진적으로 진행된 조선 사회의 근대적 변화와 급진적으로 진행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를 경험하면서, 3·1운동으로 전 민족적 대표성을 갖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통해서 분명한 근대 국가관으로 정립된 것이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강화도사건을 통해서 근대 국제법체제로 편입되었던 전 근대적인 조선왕조로부터, ‘근대적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국 이래 발아하여 성장하고 있던 일반 대중의 시민적 의식과 권리 의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명실공히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려 하기보다는 전통적인 지배세력이 전근대적인 왕권의 강화를 통해서 통치의 차원에서 근대적 개혁을 이끌어가고자 했던 그러나 결국 병합되고 만 ‘대한제국’의 경험을 거쳐서 정립된 것이었다. 또한 병합으로부터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전개된 다양한 ‘개조’의 흐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근대 사조와 정치체제를 체험적으로 인식하며 이루어진 현실적인 귀결이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한국 근대 국가관은, 3·1운동을 통해서 분출된 민족 독립과 근대적 독립 민족 국가 건설의 지향이 응집된 한반도 민중의 이상향이었다. 또한 그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가관으로 정립된 것은, 국내외의 정치지도자들이 개국 이래 성장해온 한반도 민중의 근대적인 개혁과 주권에 대한 의식과 지향을 잘 알고 받아들여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독립 민족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식민지의 현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떠한 민주공화국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논하고 구체화하기에 앞서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토대로써 민족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관건이 되게 했다. 그 결과 민주공화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민족 독립 운동에 내포되어 있던 현실의 일본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러시아혁

명의 영향과 개조 논쟁을 거치며 문화적 방법과 사회혁명적 방법으로 뚜렷하게 분화되면서 함께 분화되게 했다. 더불어서 이상적인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방법도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실의 일본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식민지 민족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민족운동의 방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월슨의 민족자결원칙에 고무되었던 3·1운동과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독립청원이 실패하고 베르사이유조약에 이어서 체결된 워싱턴회의의 결과는, 민족자결원칙에 고무되었던 자유주의 열강에 대한 기대가 결국 현실 제국주의의 힘을 재확인하고 좌절되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던 성공한 러시아혁명의 영향은 제국주의적 자유주의 열강에 대한 기대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새로운 민족 독립의 가능성이 있는 이념으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식민지 약소민족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조선에서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성공한 러시아혁명의 공산주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독립의 방안을 모색했다. 전후 처리 결과를 보며 자유주의체제에 회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열강과 같은 독립 국가를 지향했던 자유주의 민족운동이 식민지 수탈체제의 강화로 인한 경제적 모순의 심화를 이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해결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⁸⁾

사실 이미 공산주의는 그 내용을 알기도 전에 러시아혁명의 성공 소식과 더불어 한국사회에도 전파되어 동경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서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정도였다.⁹⁾ 3·1운동 당시에도 적기(赤旗)가 등장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¹⁰⁾ “대통령이 선출되면 국민전체에 걸쳐 재산을 균분하게 될 것이라 하여 사회주의적 언사를 농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조선 독립 시에는 재산을 평등하게 나눠줄 것이므로 빈곤자로서는 무상의 행복이 될 것이라 칭하며 독립의 실현을 기대는 정황”이¹¹⁾ 있을 정도였다.

민족자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열강의 이익이 우선시된데 비해서 볼셰비키정부는 공산주의혁명 직후 제정러시아 치하에서 억압받던 피압박 민족들의 독립을 선언하고 해방시켰다. 공산주의가 좌절된 자유주의 열강에 대한 독립 지원의 희망을 대체하며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성공한 러시아혁명은 볼셰비키정부의 민족자결선언을 매개로 하여 항일민족독립운동 선상에서 제국주의적 자유주의와 반비례하며 공산주의가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으로써 민족독립운동의 방법과 독립 민족 국가 건설 구상까지 제공하며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볼셰비키혁명 직후 소비에트공화국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국제공산당 코민테른을 결성하여 공산주의가 약소민족의 해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하여 약소민족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화했다. 이는 3·1운동을 계기로 초보적

8) 방기중(1992), p.70

9) 東亞日報社 編, 『三一運動 50周年 記念論集』, 1969.3, pp.160~62

10) 김승화, 「三·一運動 前夜の 國際政勢」, 『偉大한 러시아 社會主義 十月革命 三十二週年 紀念 朝鮮民族解放 鬭爭史』, 김일성 종합대학, 1949, p.242.

11) 姜德相·梶村樹水 編, 『現代史資料』 25, みすず書房, 1982, p.388, pp.418~19.

인 형태로나마 각성되기 시작한 조선 민중의 민권의식과 민권의식에 기초한 민족문제·계급문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3·1운동 이후 조선인들이 사회단체를 결성하며 민권과 민족 및 계급 문제를 논하고 항일민족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러시아혁명의 성공과 자유주의 열강에 대한 실망은, 코민테른을 통해서 제시된 민족문제의 해결책에서 민족독립의 희망을 발견하고 경도하게 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경유하며 전개된 다양한 계몽적 문화운동과 ‘개조론’의 조류와 3·1운동 이후 전개된 문화정치의 합법적인 사회적 공간에서 다양한 사회단체가 결성되고 이들 합법단체와의 긴밀한 유대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경계를 피해 비밀결사 형태의 지하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이들 사회단체들 속에는 자치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실력양성론자들로 부터 자치론을 비판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물론이고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적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의 개조론자들이 혼재하며 민족 독립의 방법을 모색했다.

그 가운데 ‘제국’을 표방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그 체제 및 그 치하의 식민지 민족 독립의 문제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양 측은 공히 민족 독립 이후 민주공화국 건설을 지향했다. 그러나 그들이 지향하는 근대 국가관은 자본주의적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상반된 이념적 토대에 기초하고 있었다. 양 측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 따라서 독립 이후 수립할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노정되었다. 세칭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의 차이는 더할 것도 없었다.

결국 이념적 차이는, ‘민주공화국’으로 정립된 독립 민족 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항일 민족독립운동의 방법을 놓고 전개된 균열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분열정책 또한 강화되면서 식민지시기 내내 국내외에서 항일민족운동을 결속시켜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상징적인 조직체조차 사실상 제 구실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식민지시기 조선사회에서는, 한말 이래 형성된 서양과 같이 근대적인 민족 독립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지향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통해서 민주공화국으로 정립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그 토대가 되는 이념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공론하여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분화되고 말았다. 항일독립운동과 해방 이후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한 이념적 분화 그리고 그로 인한 국가관의 차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치안유지법을 활용한 철저한 단속과 군국주의화 아래서 항일민족독립/해방운동 전선의 분화로 연계되었다. 그리하여 분화된 항일민족독립운동의 구심점을 정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수립되었어야 할 근대적인 민족 독립 국가(국민국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방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다.

5. 맺으며

병합 전후 자각되기 시작한 민족의식은 3·1을 통해서 민족주의로 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이념적 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민족 독립과 민족 국가 건설 지향으로 현재화 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결실을 맺었다. 그리하여 주권재민의 공화주의를 정체로 한 민주공화국을 독립 민족 국가의 상으로 정립되게 했다. 한국 사회의 근대 국가 또한 서양 근대 민족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민주권과 평등사상을 핵심으로 한 민족주의를 토대로, 민족의 주권이 민중에게 있는 정치체제·국가체제를 실현하는 민주공화국을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상으로 정립했고 할 수 있다.¹²⁾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통해서 정립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근대적 독립 민족 국가 건설관은 전 민족적으로 공유되던 바였다. 이 점에서는 이른바 세칭 민족주의 세력도 사회주의 세력도 이의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정치적인 이념적 지향을 전망하는 민족주의의 이념체계가 구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범 사회주의 세력과 자유주의적 산업발전을 지향하는 세칭 민족주의 세력 간의 이념적 차이가 항일 민족운동 방식과 결부되어 대립하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로 인하여, 근대 민족 국가 건설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한국민족주의 이념은 물론이고, 민주공화국의 내용이, 전 민족을 포괄하는 하나의 이념체계를 구축해 통합되지 못하고 민족독립운동 방식과 함께 표류하며 균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맞이하게 된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부여한 국제세력의 냉전과 맞물려 민족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분단되는 상황에 처하게 했다. 1945년 8월 15일 민족해방은 곧바로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직결되지 못했다. 3년여의 미군정기를 거친 후 1948년 8월 15일에도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대한민국의 수립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포괄할 대한민국을 전망하며 38선 이남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1919년 3·1 운동을 통해서 거족적으로 분출된 민족 독립과 독립 민족 국가 건설의 열망을 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 건설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패전으로 인하여 맞이하게 된 해방과 함께 국제적인 냉전구조와 맞물린 분단구조 속에서, 독립운동과정에서 분화되었던 이념적 균열을 극복할 여지도 없이 미·소 군의 분할 점령과 직결되어 38선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통일 민주공화국을 전망하는 정부의 수립으로 귀결되었다.

분단체제에서 한국인들은 1919년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통해서 정립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가를 발전시켜왔다. 냉전이 와해된 후 남·북한은 모두 국제관계에서 각각 하나의 주권을 갖는 주체로서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이러한 현실은 해방정국에서

12) 전상숙, 『한국 근대 민족주의와 변혁이념, 민주공화주의』, 신서원, 2018.

주창된 한민족의 ‘자유’를 위한 ‘완전한 독립’의 의미를 역사정치적 되돌아보게 한다. 또한 식민지시기를 거쳐 비록 스스로 독립한 것은 아니었지만 3·1운동이라는 거족적인 민족독립의지를 응집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근대 국가 건설의 의지를 결집시켰던 역사적인 의미를 지금까지 대한민국헌법을 통해서 지키고자 한 1948년 8월 15일 당시의 초심을 재음미해보아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한반도를 터전으로 역사와 문화를 이루며 살아온 한민족 공동체의 삶과 생활은 식민지배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반도를 생활권으로 하는 한민족 공동체 구성원의 내용이 변화되고 생활 양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역사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보다 나은 통합과 진보를 향하여 반면교사가 되는 교훈적 의미를 갖는다. ‘민주공화국’의 ‘인민주권’ 문제는 물론이고 다문화를 포함한 국민적 통합 문제와 더불어서 남·북 통일의 문제를 포괄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민족 인식 또한 총체적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가상을 충실하게 현재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논하고 정립해야 할 것이다.

3·1과 민주공화국의 탄생: 현재적 의미 제고

이영록 교수(조선대)

전상숙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의 요지를 거칠게 요약하면, 3.1운동(혁명)을 통해 한민족이 거족적인 민족독립 의지를 응집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근대국가 건설의 지향을 민주공화국으로 귀일시켰다. 그러나 일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그에 따른 독립운동의 방법의 차이가 어떤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이념적 분화를 야기했고, 이것이 해방 후 국제적 냉전 구조 속에서 분단으로 귀결되었다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의 제목이 “3·1과 민주공화국의 탄생: 현재적 의미 제고”로 되어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3·1과 민주공화국의 탄생에서 제고하고자 하는 현재적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3.1운동이 거족적이었지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진영의 이념적 분화를 막지 못했고, 이것이 해방 후 이데올로기적 분단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더구나 그것이 오늘날 특별히 제고해야 할 의미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간취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표자께서는 발표문 맨 마지막에서 “민주공화국의 ‘인민주권’ 문제는 물론이고 다문화화를 포함한 국민적 통합 문제와 더불어서 남·북 통일의 문제를 포괄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민족 인식 또한 총체적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가상을 충실하게 현재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논하고 정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민주공화국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발표 제목으로 본다면 3.1운동 역시 그런 끊임없는 재해석 내지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다면, 단순히 제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를 논하는 것이 오늘 발표 제목에 더 어울리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극복의 대상으로서 이념의 분화에 대한 설명은 그 심각성이 오히려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한의 대립 문제만을 국한하여 본다면, 이념의 분화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해석 내지 평가 자체가 현재

남북한 사이에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표문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지하듯이 이 분열은 이미 3.1운동 직후부터 지속되어 온 뿌리 깊은 것입니다. 해방 후 분단 과정에서 민족 대 계급이라는 3.1운동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단순히 3.1운동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서로 상대를 공격하는 이데올로기적 무기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3.1운동과 민주공화국에 대한 북한의 평가를 고려하지 않고서 남북통일을 포함하여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3.1운동과 민주공화국을 재해석하는 것은 일방적이거나 반쪽에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3.1운동이라는 거족적인 민족독립의지를 응집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근대 국가 건설의 의지를 결집시켰던 역사적인 의미를 지금까지 대한민국헌법을 통해서 지키고자 한 1948년 8월 15일 당시의 초심을 재음미해보아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는 발표문의 구절은 약간 혼동스럽기조차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근대 국가 건설의 의지를 결집시켰던 역사적 의미를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발표문의 흐름을 따른다면 당시의 초심은 이념적 분열의 절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소할 수 있지만,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민주공화국을 군주제를 두지 않는 주권재민의 국가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함의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고 봅니다. 심지어 해방 후 좌파에서는 민주공화국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인민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3.1운동 후 사회주의 세력도 민주공화국 건설의 의지에는 이의가 없었던 것과 같은 서술을 하려면, 저간의 의미 변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저자가 의미하고자 하는 뜻을 좀 더 명확히 정의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범 사회주의 세력과 자유주의적 산업발전을 지향하는 세칭 민족주의 세력의 이념적 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적 산업발전을 지향하는 세칭 민족주의 세력’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 의문입니다. 해방 후를 기준으로 보면,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지 어느 정파든지 강력한 통제경제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는 것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2) 민주시민의 출현

발제 김정인 교수(춘천교대)

토론 이나미 교수(한서대)



3·1운동과 민주시민의 출현

김정인 교수(춘천교대)

1. 민주주의의 만개, 민주시민의 탄생

1700만 명. 2016년 가을에 시작되어 한겨울을 거쳐 2017년 초봄까지 이어진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한 연인원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2017년의 시작을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를 추운 겨울 거리에서 촛불과 함께 맞았다. 압도적 숫자보다 놀라운 것은 남녀와 세대, 계급과 계층을 넘어 너나할 것 없이 촛불을 들었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촛불로 가득한 광장을 자발적으로 찾아온 시민들은 생전 처음 보는 주변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끼며 양보하고 배려했다. 내 주변에 온통 나처럼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로 가득하면 행복할 수 있음을 경험했다. 거리로 나선 그들이 바로 민주시민이었다. 100년 전, 3·1운동에서도 사람들은 똑같은 경험을 했다. 식민지민으로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독립 만세를 불렀다. 누구나 조직하고 누구나 참여하는 자발성이 바로 3·1운동의 전국화·일상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3·1운동으로 새로운 정치·사회 주체들이 등장했다. 종교계는 3·1운동의 모의와 발발의 주역이었다. 특히 천도교는 교단 차원에서 3·1운동에 헌신하면서 민족운동 진영 안에 주류로 자리를 잡았다. 3·1운동에서 역사상 처음 운동세력으로 등장한 학생들은 만세시위의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만세시위에 앞장 선 여학생의 모습은 시대 변화를 더욱 실감하게 했다. 노동자와 농민들은 만세시위에 참여하며 운동주체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자각할 수 있었다. 3·1운동을 등장한 새로운 주체들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여기서 잠깐 3·1운동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살펴보자. 19세기 신분해방 이래 조선과 대한제국에서는 인민들은 자유·자치와 평등·정의를 추구하고 입헌군주제 혹은 공화제 국가로의 전환을 꿈꾸며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를 빚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의회가 존재하고 참정권이 있는 나라인 일본은 대한제국을 멸망시키고 획득한 식민지 조선에 일본 헌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일본 군부가 식민지 조선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전제에 가까운 군사독재형 통치를 실시했다. 식민지민의 입장에서 볼 때, 민주주의를 되살리

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을 이루어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었다.

3·1운동 당시 등장한 독립선언서들은 식민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탄압을 비판했다.〈2.8독립선언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는 ‘무단전제의 부정하고 불평등한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인에게 참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불허하고 신교(信敎)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구속했으며 행정·사법·경찰 등 모든 통치기관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을 통해 나라를 되찾아야 했다.〈3·1독립선언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한국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독립과 자주, 평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민족 생존의 권리, 즉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3·1독립선언서〉는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과 ‘전 인류의 공존동생권’을 내세우며 민족마다의 자유 발전과 인류로서 차별없는 대접을 강조했다. 1919년 3월 17일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가 발표한 〈조선독립선언서〉는 일본을 민주주의의 공적이라 비판하며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볼 때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자는 독립투쟁에 나선 우리 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3·1운동에서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민주주의였다. 3·1운동은 민족마다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마땅히 독립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저항운동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독립운동은 자유, 정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이었다. 여기에 동조해 독립선언을 준비하고 만세시위를 조직하고 또한 참여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한 정치·사회 주체를 어떻게 개념화시켜 호명할 수 있을까.

민주시민이란 개념이 있다. ‘민주주의의 원리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지며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시민의 사전적 정의다. 독립운동가 김산은 일제시기 모든 한국인들이 독립과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유를 원하는 것인데, 여기서 자유는 일제의 압제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결혼과 연애의 자유,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유, 자기 삶을 스스로 규정할 자유를 포함했다.¹⁾ 일제의 압제로부터의 자유는 곧 독립을 의미한다. 그런데, ‘결혼과 연애의 자유,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유, 자기 삶을 스스로 규정할 자유’는 개인이 삶의 주체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개인의 눈높이에서 자유를 요구한다

1) 님 웨일즈·김산(송영인 옮김), 《아리랑》, 동녘, 2014, 190쪽.

는 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삶의 가치로서 내재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개인과 민족, 사회의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살아온 정치·사회 주체들은 앞서 언급한 민주시민으로 개념화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과학계는 이제껏 민주주의는 해방 이후 미국에 의해 들어왔다는 외삽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²⁾ 역사학계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만 일제 시기를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일제시기 정치·사회적 주체들은 독립운동이든 사회운동이든 민주주의에 기반해 실천 활동을 펼쳤다. 그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민주 시민으로 개념화하는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듯하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반포한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기뻐했다’던 정치·사회적 주체, 즉 ‘민주시민’은 3·1운동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본 발표를 통해서는 3·1운동과 그 이후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정치·사회 주체의 탄생을 살펴 이를 민주시민의 출현이라는 시각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³⁾

2. 3·1운동과 새로운 정치·사회 주체의 등장

1) 종교세력 : 주류로 부상한 천도교

3·1운동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 세력이 촉발했다. 그 중에서도 천도교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종교간 연대로 민족대표를 구성하고 운동자금을 제공했으며, 전국에 보낼 〈3·1독립선언서〉를 인쇄했다. 천도교 중앙 지도자들의 헌신에 지방에 사는 천도교인들은 만 세시위로 화답했다.

천도교는 동학의 3대 교주로서 동학농민전쟁을 이끌었던 손병희가 1905년에 창건한 신흥 종교였다. 1910년에 대한제국이 망하고 일본이라는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엄혹한 시절이 찾아왔다. 조선총독부는 모든 정치·사회단체를 해산시켰다. 이 무단통치 시대에 그나마 종교단체만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숨 쉴 곳을 찾던 사람들이 종교에 몰려들었다. 그 덕에 천도교는 단숨에 100만 교인을 자랑하는 최대 종교로 부상했다.

천도교는 조직적으로 3·1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의 민족대표 중 천도교 지도자는 모두 15명이었다. 이들은 천도교를 이끄는 핵심간부들이었다. 그들은 조선총독부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친일귀족을 통치의 파트너로 대우한 것은 한국인의 정서에 배치된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일본정부의 안이한 식민정책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

2) 김정인, 〈한국 민주주의 기원의 재구성〉, 《기억과 전망》39, 2018, 12쪽.

3) 본 발표문은 출처인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책과함께, 2015),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책과함께, 2017), 《오늘과 마주한 3·1운동》(책과함께, 2019)에서 본 주제에 맞는 내용을 발췌해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천도교는 독립선언서와 지하신문인 <조선독립신문>을 제작하고 배포해 시위의 전국 확산에 기여했다. 천도교월보사 사장 이종일은 보성사에서 2만 1천매의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뒤 천도교, 기독교, 불교 지도자들을 통해 전국에 배포했다. 3·1운동 당시 천도교 지도부는 일시에 모든 교인을 총동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앙총부-대교구-교구-전교실의 행정망과 연원이라는 천도교인 간의 긴밀한 인적 연결망을 통해 서울과 각 지방의 시위소식이 궁벽 산촌의 천도교인에게까지 빠르게 전파되었다. 그 소식은 곧 조직적인 시위로 이어졌다. 3·1운동에서 천도교의 활약이 두드러진 지역은 천도교인 밀집 지역인 황해도·평안남북도·함경도 등 북부지방이었다. 천도교는 3·1운동에 필요한 거액의 운동자금도 제공했다. 기독교 지도자인 이승훈이 기독교 민족대표들의 체포 이후 가족들의 생계자금으로 요구한 5천 원을 즉각 제공했다.

천도교는 3·1운동에 전교단적으로 투신한 까닭에 존폐의 위기에 처했지만, 3·1운동에서의 공헌 덕분에 정치적 위상과 사회적 영향력은 높아졌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정치·사회단체를 해산한 후 종교단체로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던 천도교는 식민지라는 특수 상황에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사회 주체로 부상했다.

2) 학생, 역사에 등장하다

학생은 3·1운동에서 처음 등장한 정치·사회 세력이었다. 3·1운동의 모의단계부터 학생들의 활약은 대단했다.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발표한 <2.8독립선언서>가 3·1운동을 촉발하는 자극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도쿄 유학생들은 자신들만의 2.8독립선언을 모의하지 않았다. 독립선언을 준비하면서 와세다대생인 송계백을 국내로 밀파해 독립운동을 촉구했다.

서울 시내 전문학교 학생들은 1919년 1월 말부터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모의했다. 1월 26일 경 연희전문학교의 김원벽,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의 강기덕,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한위건 등이 보성전문학교 졸업생인 주익, 기독교청년회 간사 박희도 등과 함께 모임을 갖고 독립운동 문제를 논의했다. 2월에 들어서는 주익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전문학교 학생을 동원하여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3월 1일 오후 2시에 탑골공원에서 종교계 주도의 독립선언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자 회의를 열어 3월 1일에 중등학교 학생들을 동원해 탑골공원에서 독립시위를 벌이되, 3월 5일에는 학생만의 독자적 시위를 벌인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2월 28일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서울 시내에서 선언서를 배포하고 군중을 동원하는 일은 학생의 몫이 되었다. 강기덕은 2월 28일 오후 4시경 정동교회에서 33인 민족대표 중 한 사람인 이갑성에게 선언서 약 1,500매를 건네받았다. 그날 밤 중등학교 대표들이 모여 선언서를 나누었다.

3월 1일이 되자 각 학교에서는 학생 대표가 나서 ‘우리들의 대표가 파리강화회의에 참가하

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오늘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취지의 연설을 한 후 학생들을 탑골공원으로 이끌었다. 200 여명의 학생들이 탑골 공원에 모였다. 오후 2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삼창을 부른 뒤 시가행진에 나섰다. 학생 독자 시위 예정일이던 3월 5일 오전 9시 남대문역 광장에 수천 명 학생들이 집결하여 독립 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시위에는 거리의 시민은 물론 고종 장례식에 참여하고 귀향길에 오르기 위해 역으로 나온 사람들이 합세했다. 시위대 규모는 순식간에 1만 명으로 늘어났다. 시위대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가행진에 돌입했다. 시내를 돌던 시위대는 보신각 앞에서 경찰의 저지로 해산했다.

조선총독부는 학생 시위의 확대를 우려하며 3월 10일 서울 시내 중등학교와 전문학교에 임시휴교령을 내렸다. 그러자 학생들은 선언서를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 독립시위를 일으켰다. 휴교조치가 3·1운동의 확산에 기여한 셈이다. 유관순의 경우도 이화학당 학생으로서 3월 1일과 3월 5일 시위에 참여한 후 임시휴교령이 내리자 독립선언서를 들고 3월 13일 귀향해 시위를 모의했고 4월 1일 병천 아우내 장터에서 장날을 기해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이처럼 중앙 지도부가 부재함에도 3월 1일의 시위가 두 달이 넘는 전국적 항쟁으로 확산된 데는 학생들이 큰 역할을 했다.

3) 여학생, 정치·사회 주체로서의 여성의 탄생

3·1운동 당시 학생의 등장보다 더 주목받은 것은 여학생의 등장이었다. 더욱이 여학생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다 검거되고 투옥되어 재판받는 모습은 한국인에게도 신선한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는 여학생들의 모습이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증오와 분노의 격렬한 감정을 불러”⁴⁾일으켰다고 한다. 여학생들의 활약과 고초가 사람들을 시위에 나서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이다.

3·1운동에서 처음 등장하는 여학생은 일본 유학생인 김마리아이다. 김마리아는 도쿄여자유학생친목회 회장으로서 〈2.8독립선언서〉를 발표할 때 참석했고 〈2.8독립선언서〉를 품고 귀국해 2.8독립선언 소식을 알리고 교사, 유학생 등 여성들과 여학생 만세시위를 준비했다. 오늘날 3·1운동을 상징적 인물로서 추앙받는 여학생을 대표하는 것은 유관순이다. 그런데 유관순은 이제껏 만세시위에서 부모님을 잃고 난 후 애끓는 효심을 바탕으로 끝까지 저항한 독립투사로 그려졌다. 그래서 함북 명천 시위에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자 만세시위에 앞장섰다가 서대문감옥에서 옥사한 동풍신을 복한의 유관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효라는 전통적 가치에 기반한 평가 속에 유관순이 정치·사회 주체로서의 학생의 등장, 특히 여성+학생의 등장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었던 셈이다.

4) 김상태 편역, 《윤치호 일기》, 역사비평사, 2001, 86쪽.

3월 초 만세시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여학생이 최초로 만세시위를 벌인 지역들이 있었다. 개성에서는 3월 1일 호수돈여학교 부설 유치원 교사인 권애라와 여전도사인 어윤희가 개성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했다. 다음날 그녀들은 호수돈여학교 학생들과 만세시위를 준비했다. 이튿날인 3월 3일 호수돈여학교 학생 35명은 기도회를 마치고 찬송가를 부르며 거리 행진에 나섰다. 어윤희가 연설을 시작하자 여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개성 최초의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부산 최초의 만세시위도 일신여학교 학생들에 의해 일어났다. 일신여학교 학생들은 3월 10일 기숙사에 모여 태극기 100개를 제작했다. 다음날인 3월 11일 밤 9시 11명의 학생이 교사인 주경애, 박시연과 함께 태극기를 손에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기숙사를 나와 좌천동 거리까지 행진하는 시위를 감행했다. 일신여학교의 만세시위는 부산 최초이기도 했지만, 경남 지역 만세시위의 효시이기도 했다.

4) 노동자와 농민, 민중의 등장

민중은 자신들이 만세를 불러야 독립이 된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일본인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3·1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절대독립 쟁취의식이 분명한 민중이 점차 시위의 전면에 나섰다. 무엇보다 확연한 변화는 노동자의 진출이었다. 서울에서는 3월 2일 노동자들이 학생들과 함께 만세시위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출근을 거부하는 풍토가 생겨났다. 3월 10일 이후에는 평소의 10%에 불과한 노동자만 출근하면서 공장들이 조업 불능 상태에 빠졌다. 3월 하순에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검거되어 서울의 만세시위가 주춤해지자 노동자들이 나섰다. 3월 22일에는 300-400여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독립운동 참가를 촉구하는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대회’,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들고 시내를 활보하며 시위했다. 3월 26, 27일에 전차 종업원, 남만주철도주식회사 경성관리국 노동자들이 동맹파업을 일으키고 곳곳에서 투석전이 벌어지면서 서울의 만세시위는 절정에 이르렀다. 노동자의 동맹파업은 서울을 비롯하여 평양, 진남포, 부산, 군산 등 공장과 노동자가 집중된 도시 지역에서 발생했다.

농촌에서는 농민이 만세시위의 주요 동력이었다. 농민은 단순히 독립을 위한 만세시위만이 아니라 각종 우량품종 · 상묘의 수령 거부 내지 폐기, 부역 거부, 납세 고지서 수령 거부 등 조선총독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투쟁과 일본 상품 배척, 일본인에 대한 식량 및 연료 판매 거부 등 일상적인 경제투쟁도 동시에 전개했다. 농민들의 폭력투쟁은 대체로 시위 과정에서 무자비한 탄압에 따른 방어적 조치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권력기관을 접수하거나 계획적이고 공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1919년 4월 1일에는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에서 ‘원곡면과 양성면의 순사주재소, 면사무소, 우편소 등을 파괴하라, 일본인을 내쫓아라, 여러분은 돌 또는 몽둥이를 지참하여 투쟁하라’는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시위대가 양성면에 몰려가 양성면의 시위대와 함께 주재소에 불을 지르고 우편소를 파괴하고 일본인 상점과 대금업자의

집을 부수었다. 그리고는 다시 면사무소를 습격해 서류, 집기, 일장기를 불태웠다. 다음날인 4월 2일에는 평북 의주군 옥상면에서 시위대가 면사무소로 몰려가 직원에게 ‘우리는 이미 독립을 선언했으니, 금일 이후 면사무소는 마땅히 폐지하고 우리가 새로 조직할 자치민단에 면사무소 청사, 비품, 재산 등을 일체 넘겨라’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비품, 장부, 현금 등을 압수하고 사무소를 점거한 후 10여 일 간에 걸쳐 자치업무를 집행했다.

노동자와 농민의 투쟁을 추동한 것은 삶을 옥죄는 권력으로부터의 해방 의지였다. 노동자는 기아 임금, 차별 임금, 살인적 노동조건 등에 희생당하고 있었다. 농민은 일본인 지주에 의한 토지 수탈, 조선총독부의 무단농정, 과중한 세금, 부역 징발 등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들에게 독립은 자신들을 고통의 나락에서 건져 줄 희망적 대안이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고통에 대한 처방으로 독립을 갈구했던 것이다.

3·1운동은 이후 한국인 사회를 이끌 새로운 정치·사회 주체를 탄생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주도적으로 3·1운동을 이끌었던 천도교는 문화계몽운동, 사회주의·좌파 세력의 부상, 민족주의·우파 세력의 타협과 비타협으로의 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인 사회의 주류로 자리를 잡았다. 학생들은 3·1운동을 통해 등장해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이라는 일제시기 대표적인 대중시위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여성들은 학교 교육을 받은 신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을 사회운동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으며 전국적인 여성운동 조직인 근우회를 탄생시켰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쟁의를 벌였으며 전국적 차원의 조선노동총동맹을 조직했고 원산총파업을 이끌어냈다. 농민들은 각종 농민단체를 만들고 소작쟁의를 벌이며 압태도 소작쟁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전국적 차원의 조선농민총동맹을 결성했다.

3. 새로운 주체, 민주주의 사회를 일구다.

3·1운동으로 떠오른 정치·사회 주체들은 독립과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을 꿈꾸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을 전개했다. 3·1운동 이후 민주주의는 한국인 사회를 이끄는 삶과 운동의 원리로 작동했다. 새롭게 부상한 정치·사회 주체들은 스스로 자치 공간을 만들어 냈고 대중운동을 펼쳤으며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다양한 사상이 만개해 서로 다투었고 조선총독부의 폭압에 대해 ‘정의’의 이름으로 맞섰으며 비폭력, 연대, 평화의 정신을 일궜다.

1) 자치의 공간이 탄생하다.

일본인이 식민권력을 차지하고 한국인을 통치하고 지배하던 시절,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

라 잃었을 뿐인 한국인은 식민권력의 ‘밖’에 한국인만의 정부를 만들어 주권 자치를 꾀하고 의회와 정당을 비롯한 자발적 결사체와 자치공동체를 만들어나갔다. 한국인이 있는 곳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디든 한국인만의 자치 공간이 꾸려졌다. 그 자치 공간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리는 민주주의였다. 군부 출신의 조선총독이 삼권을 장악하는 전제적인 군사독재 치하에서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한국인만의 자치 공간에서는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었다.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19세기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빼앗기는 듯했으나, 한국인만의 자치 공간이 그것을 지켜내고 키워나갔던 것이다.

한국인들의 자치 공간 중심에 임시정부가 있었다. 해외로 망명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대한제국이 멸망할 무렵부터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힘썼다. 그 노력은 3·1운동의 열기 속에서 결실을 맺었다. 나라를 잃은 지 9년 만인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임시정부가 수립될 당시 나라를 잃고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세우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일이었다. 다만 합법성을 갖추려면 국제법에 입각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임시정부가 수립된 소재지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임시정부는 27년 동안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체모를 유지하며 주권적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임시정부가 있던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끝내 임시정부를 공식 승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임시정부는 단 하루도 문을 닫지 않고 주권 자치의 공간으로 존속했으며 마침내 해방을 맞았다.

그와 같은 한국인만의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이 만든 (임시)헌장에 따라 탄생한 민주공화국이었다. 한국인의 자치 공간에는 정부, 의회, 헌법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공산당, 조선민족혁명당, 한국독립당 등의 정당들과 신간회 같은 전국적 규모의 합법적 정치결사가 있어 민주주의 정치를 익힐 수 있었다. 고향을 떠나 만주로, 미국으로, 연해주로 떠난 사람들은 이 역 땅에서 자발적 결사체를 만들어 평등한 자치공동체를 운영하며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을 살았다. 1910년 국망을 전후하여 이들을 이끈 초기 결사체에는 북간도의 간민교육회와 그것을 발전시킨 간민회, 서간도의 경학사와 그것을 계승 발전시킨 부민단, 연해주의 권업회, 미국의 대한인국민회 등이 있었다. 일제 시기 내내 한국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자치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존재했다.

2) 대중운동의 주체로 거듭나다

3·1운동 이후 제한적이거나 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자, 대중운동이 폭발적인 기세로 성장했다. 학생운동은 3·1운동을 통해 등장하여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이라는 일제시기 대표적인 대중시위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전국에서 독서회와 같은 비밀결사를 만들어 활동하고 학교 문제와 민족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일으킨 것도 학생이었다.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전국 조직인 조선노동총동맹을 결성했으며 나중에는 농민운동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전국조직인 조선노동총동맹을 건설했다.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던 노동쟁의는 차츰 노동조합과 지역노동연맹체, 전국적 기관인 노동총동맹과의 연대 하에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파업으로 나아갔으며 그 정점에 원산총파업이 있었다. 농민들은 각종 농민단체를 만들고 소작쟁의를 벌이며 압태도 소작쟁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전국적 차원의 조선농민총동맹을 결성했다. 여성운동은 학교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여성계몽운동에서 출발하여 전국적 여성운동조직인 근우회를 탄생시켰다. 청년운동은 3·1운동 이후 결사의 자유가 허용된 이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가 결성된 사회운동단체인 청년회들을 기반으로 가장 먼저 전국적 조직인 조선청년회연합회를 결성했고, 조선노동총동맹이 결성될 무렵, 청년세력 독자의 조선청년총동맹을 창립했다. 소년운동은 미래의 동량으로서 어린이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천도교소년회로부터 발원하여 조선소년연합회와 조선소년총연맹라는 전국적 조직을 결성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일제시기 대중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 소년운동의 절정기는 1920년대였다.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탄생하고 성장했다. 1930년대 이후에는 침체의 길을 걸었다. 객관적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서 한국인과 한국인 사회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해갔다. 대중운동이 있던 자리에는 관변단체가 들어섰다. 주체적 상황도 달라졌다. 1920년대에 새롭게 세력을 형성하고 대중운동의 성장을 견인했던 사회주의 운동이 지하화, 즉 비합법의 길을 선택했다.

짧았지만 열광적이었던 대중운동의 시대, 사람들은 대중운동을 통해 스스로가 학생,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어린이라고 하는 주체적 자각을 경험했다. 근대적 주체로서의 자각이 각자의 사회적·경제적·세대적 처지에 기반하여 서서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대중운동 과정에서 빠르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대중운동의 주체로서 탄생한 학생,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어린이가 대중운동을 통해 익힌 것은 결사를 만들어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저항하는 권리를 함께 누리는 힘, 바로 민주주의였다.

3)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서다

조선총독부는 한국인의 정치적 권리를 핍박했다. 정치적 자유를 억압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무단통치는 자유 없는 속박의 생활 그 자체였다.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가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적이나 허용했으나, 그 허용된 틈새를 또다시 자유를 위한 투쟁의 장으로 삼아야 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은 곧 권리의식에서 발원한다. 자유롭게 말할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없을 때 그것을 되찾기 위해 자유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처음부터 한국인의 눈과 귀를 철저히 틀어막았다. 식민권력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것만 보고 들을 것을 강요했다. 3·1운동을 일으킨 한국인은 지하신문을 비롯한 인

쇄매체를 돌려 읽으며 식민권력의 눈 가리고 아웅식 언론 탄압에 일격을 가했다. 이후 조선어 신문과 잡지가 발간되면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사전 검열제도를 실시하고 언론인을 협박하거나 구속하는 등 언론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언론인들은 언론인의 결사체 혹은 사회운동단체와의 연대체인 언론집회압박탄핵대회 등을 결성하여 언론 탄압 나아가 집회 금지를 남발하는 식민권력에 언론의 자유를 달라며 맞섰다.

언론수호운동이 식민권력에 대한 한국인의 민주주의 투쟁이었다면, 형평운동은 ‘우리 안의 차별의식’과 싸우는 민주주의 투쟁이었다.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제도적 해방을 얻었으나, 여전히 사회적인 차별에 시달리던 백정 출신들은 스스로 나서 형평사를 만들고 형평운동을 전개했다. 사회운동단체의 적극적 지지와 연대 속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한 인권운동을 펼치는 동안에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형평운동에 맞서야 했다. 차별받는 소수자인 백정 출신들은 스스로 형평사라는 결사를 조직하고 차별적 대우와 인권 유린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 백정 출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사라져갔다.

식민 지배로 인해 크게 훼손된 권리 중 하나가 교육받을 권리였다. 교육받을 권리는 19세기 독일, 벨기에를 비롯한 서양 여러 나라의 헌법에 명시되기 시작한 기본적인 권리였다. 교육받을 권리는 시민권의 필요조건이며 무엇보다 공적 교육의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조선총독부를 향해 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동시에 스스로 대안을 찾아나갔다. 지역마다 뜻과 돈을 모아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는 학교설립운동을 벌였고, 고등교육을 펼치기 위해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전개했으며, 학교 문턱을 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야학을 실시하고 개량서당을 세웠다.

한국인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식민권력의 독재와 전제에 맞서고 스스로 주체로 나서 ‘우리 안의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빼앗긴 권리에 좌절하지 않고 대안을 마련하여 스스로 누리며 진행되었다. 그것은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4) 사상의 꽃을 피우다.

한반도 안 식민권력은 사상의 자유를 옥죄었다. 하지만 한국인의 활동 반경은 한반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중국 관내와 만주, 연해주, 멀리 미국에서도 한국인은 스스로 혹은 중국인, 일본인과 연대하여 다양하고도 풍부한 사상의 향연을 벌였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상은 역시 민족주의였다. 민족주의는 국내외에서 식민권력에 맞서는 저항의 절대 동력이었다. 반제국주의론, 민족자결주의, 절대독립론에 바탕한 민족주의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사회주의마저 품고 독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언명령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사회주의가 등장하면서 독립운동 진영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었고 국내에서는 민족담론을 둘러싼 논쟁 속에 민족주의도 타협과 비타협의 두 길로 갈라섰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 등지를 틀었던 신간회가 해체되면서 민족주의 진영은 ‘조선을 알

자'며 조선학운동을 제기했고, 이 운동을 이끌었던 안재홍은 민족주의의 이론화에 나서 신민족주의를 탄생시켰다.

사회주의, 즉 마르크스주의 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기성의 사상체제였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원전'을 통해 익혀야 하는 사상이었다. 양과 질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떨어졌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레닌의 원전이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사회주의 운동에서는 역시 혁명론이 중요했다. 조선혁명은 곧 사회주의 혁명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민족혁명을 거쳐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상존하며 갈등했다. 조선공산당은 국제공산당인 코민테른의 승인을 받았으나 다시 승인이 취소되면서 해체되었다. 이후 코민테른의 12월 테제는 한국인 사회주의자의 나침판이 되었으나, 노선방침에 따라 코민테른이 다시 제시한 인민전선은 현실 여건상 기본 노선의 지위를 획득하지는 못했다.

제3의 사상으로 각광받던 아나키즘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물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도 적대적이었다. 정치혁명도 거부하면서 민중에 의한 직접혁명을 주장했다.

민주주의는 독립을 통해 되살려야 하는 대안의 가치로서 다양한 얼굴로 존재했다. 3·1운동 당시 발표한 독립선언서들은 독립운동이 식민통치로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 주장했다. 이 때 자주와 평등, 그리고 정의와 평화라는 민주주의를 획득해야 하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민족'이었다. 민족주의 진영은 민주주의를 조선총독부의 군사독재형 통치를 공격하는 잣대로 썼으며 가진 자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론을 내놓았다. 민주주의의 이론화도 시도되었다. 조소앙은 자신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신민주주의를 주창했다. 정치·경제·교육의 평등이 구현되는 신민주공화국이 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나라였다.

5) 법에 맞서 정의를 외치다.

사법제도는 법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만든 제도다. 갑오개혁으로 사법제도가 성립한 이래 법치주의에 입각한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졌다. 1898년 러시아어 통역관 출신 각료로서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전횡을 일삼다가 유배를 가게 된 김홍륙이 고종의 찻잔에 아편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죄인을 심문하면서 악형을 남용했고 부녀자까지 고문했다. 그러자 《독립신문》은 임금을 독살하려 한 범인이라도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되어야 하며 고문과 악형은 인민 생명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러한 선각적 인권의식은 일본에 의한 식민 통치로 넘어가면서 전혀 존중받지 못했다. 태형이라는 전근대적인 형벌이 도입되었고 고문은 그야말로 '남발'되었다.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 작성한 조서라도 재판에서는 유무죄를 가리는 증거로 채택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조서 재판'이란 말이 생겨났다. 고문-허위자백-조서에 의해 조작되는 사건도 적지 않았다. 식민통치 초입인 1911년에 일어난 '105인 사건'과 말기인 1942년에 일어난 '조선어학

회사건'이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을 대표한다.

독립운동가들이 기억하는 감옥은 죽음의 집이었다. 감옥에서는 최소한의 인권도 없었다. 형무소에서의 고문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그래도 먹방이라 불리는 고문실에서 고문은 계속되었다. 독립운동가들은 감옥을 독립운동과 인권 투쟁의 장으로 여기며 옥중투쟁을 불사했다. 48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이는 이도 있었고, 매년 3월 1일이면 약속이나 한 듯이 독립만세를 외치는 집단투쟁도 있었다.

변호사 제도는 1905년에 변호사법을 공포하면서 도입되었다. 1907년에 최초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6명이었다.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는 변호사의 변론이 곧 독립투쟁이라 여기게 된 것은 3·1운동 관련 재판부터였다. 변호사들은 독립운동가와 함께 법정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독립운동가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재판을 거부하거나 충분히 진술할 시간을 달라고 주장할 때, 변호사들은 고문에 의해 작성된 조서의 증거여부를 다투고 재판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인권유린에 항의했으며 일본의 침략주의와 조선총독부의 반인권적 행위를 비판하다가 제지당했다. 때론 변호사 자격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한국인 변호사들은 독립운동을 변론하는 동시에 사회단체인 조선변호사협회를 만들어 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했다. 변호사 중에도 사회운동가들이 배출되어 허헌과 김병로는 신간회의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약했다. 허헌은 민중대회사건과 단파방송사건으로 옥고를 치렀고, 이인은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사법제도가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공간, 즉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늘 양심수가 존재한다. 독립운동가들 역시 식민권력의 '법' 위에 독립투쟁의 '정의'가 있다고 믿기에 고문을 견뎌내고 옥중투쟁을 불사하며 스스로의 인권을 지켜내고자 했다. 또한 그들 옆에는 함께 법정투쟁을 벌이며 '독립운동'을 변론하는 변호사들이 있었다.

6) 비폭력의 힘으로 연대하다.

만세시위는 3·1운동의 비폭력 직접행동을 상징하는 말이다. 물론 3·1운동 과정에서 시위대가 무장한 경찰이나 헌병, 때로는 군인에 맞서 폭력투쟁을 전개한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국내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무장하지 않은 시위대가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는 모습이었다. 연좌시위가 인도의 비폭력 직접행동을 상징한다면 만세시위는 한국의 비폭력 직접행동을 상징한다. 이후에도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등 대규모 대중시위에서는 비폭력 시위 방식이 이어졌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무장투쟁이나 암살파괴활동이 없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을 얻고 지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다. 부당한 지배관계를 부인하는 힘, 폭력의 구조화를 떠받치는 제도 자체를 해체하고자 하는 힘을 반(反)폭력이라 정의한다. 그렇다면, 식민권력을 부인하고 식민체제를 해체하여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열단과 한민애국단의 암살파괴활동

역시 반(反)폭력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임시정부는 비폭력과 대항폭력 노선을 놓고 갈등했다. 임시정부는 초기에 독립전쟁론 대 외교론, 개전론 대 준비론 간의 노선 투쟁을 거쳐 ‘독립전쟁으로 광복을 이루되, 이를 위한 준비를 하면 때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택했다.

공동투쟁이라는 연대의 전통은 독립운동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1919년 3월 1일 경성의 만세시위는 천도교 기독교 불교를 대표하는 종교계와 학생운동세력의 연대의 산물이다.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양한 방식의 연대투쟁이 이루어졌다. 3·1운동 이후 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가 제한적이거나 허용된 후에는 압태도에서 일어난 소작쟁의도, 원산에서 일어난 노동자 총파업도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마을 단위, 군단위, 도단위, 전국단위의 지지와 성원, 즉 연대 활동과 연대 투쟁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해외에서도 지지와 성원이 답지했다. 이러한 ‘연대’ 의식과 연대 문화는 식민권력 앞의 ‘약자’로서 한국인 사회가 갖고 있던 응집력의 산물이었다. 해방 직전 임시정부, 화북조선독립동맹, 건국동맹 등 국내외에서 독립과 신국가 건설을 준비한 세력들은 독자적 노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연대와 연합을 시도하며 해방을 준비했다. 식민지 조선 ‘밖’에서는 국제연대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일본인,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과 국제 연대 조직을 결성하는 데는 아나키스트들이 앞장섰다. 중국 혁명을 도움으로써 조선 독립을 이루겠다는 연대의식을 갖고 활동한 독립운동가들도 적지 않았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들은 동양평화이든 세계평화이든 그 전제로 조선의 독립을 앞세웠다. 조선이 독립을 하는 것에서부터 동양평화와 세계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가 개조와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자, 평화를 세력균형의 관점과 국제협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났다.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동아시아 전체가 전쟁에 휩쓸려 들어갔을 때는 반전평화운동이 일어났다. 반전평화를 앞세운 활동에서는 일본에 반대하며 반전활동을 하는 일본인도 독립운동가의 ‘동지’였다.

4. 맺음말을 대신해 : 미래의 주체, 어린이에게 인권을!

민주주의 사회는 미래세대로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데 관심을 갖는다. 그것을 일러 민주시민교육이라 한다. 일제시기 한국인 사회도 마찬가지였다. 독립의 주역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의 주체로서 어린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그에 대한 기대는 어린이운동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을 대신에 민주시민교육의 원형으로서의 어린이운동을 살피고자 한다.

일제 시기 어린이라는 말 자체는 신조어가 아니었지만, 여기에 인격을 부여하여 하나의 개념체계를 구성한 이는 방정환이었다. 방정환에게 어린이는 애녀석·어린애·아해눔 등의 비칭에서 벗어나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염원이 담긴 존칭에 다름 아니었다. 즉, 그에게 어린이는 늙은이·젊은이와 대등한 인격 주체를 부르는 높임말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

처럼 어린이운동은 곧 어린이인권운동이었다.

어린이는 결코 부모의 물건이 되려고 생겨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기성사회의 주문품이 되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네는 훌륭한 한 사람으로 태어나오는 것이고 저는 저대로 독특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⁵⁾

어린이운동가들은 수직적 상하관계가 지배하는 조선의 현실에서 어린이는 약자로서 천대받으니 앞으로는 어린이의 인권은 보장되고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장유유서의 유교적 수직 관계가 온존하는 문화를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문화의 토대인 수평적 관계망, 즉 어른과 어린이 간의 평등한 관계 형성을 주장했다. 방정환은 어린이가 자유롭고 재미있게 저희끼리 기운껏 활활 뛰면서 자라도록 하는 애정어린 지도가 이루어지는 교육을 주장했다. 어린이끼리 새 사회가 서고 새 질서가 잡혀야 하는 것이지 기존의 것을 강요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그저 어린이가 요구하는 것을 주고 어린이에게서 썩이 돋는 것을 북돋아 주고 보호하는 것이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운동의 백미는 어린이날 제정이었다.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는 1922년 5월 1일에 있었다. 이듬해에는 전년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어린이날 행사가 치러졌다. 이 날 서울에 뿌려진 「어른에게 드리는 글」, 「어린 동무에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른에게 드리는 글

-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를 하여 주시오.
-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은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하게 하여 주시오.
-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 어린이들이 서로 위하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 대우주의 뇌신경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 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어린 동무에게

- 돈은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5) 소파, 〈소년의 지도에 관하여〉 《천도교회월보》 1923년 3월호.

- 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유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 입은 꼭 다물고 몸은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⁶⁾

소박하고 따뜻한 말로 어른과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위치에 있는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운동은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민주주의적 삶과 문화를 심어주었다. 미래세대인 어린이에게 독립과 민주주의를 이룰 주체로서의 성장을 기대하며 그들의 인권 신장과 교육을 고민했던 어린이운동, 그것이 바로 민주시민을 키우는 교육, 즉 민주시민교육의 뿌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6) <12만장 선전지, 시가를 네 구로 가가호호에 배포>, 《동아일보》 1923년 5월 1일.

memo

3·1운동과 민주시민의 출현

이나미 교수(한서대)

1. 민주주의의 기초는 시민과 시민사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할 때 민주공화제 등 법·제도적 측면만을 보는데, 이러한 법과 제도의 민주주의의 성공과 지속 여부는 민주적 시민사회의 존재에 달려있다. 민주시민이 없는 민주국가란 모래 위에 지은 성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한국 민주주의 100년사를 보려고 한다면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 민주시민의 역사를 보아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저자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시민사회가 형성된 시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섯 가지 정도로 의견이 나뉜다. 첫째는 조선 후기 동학혁명을 전후로 한 시기로, 이때 전통적 신분구조의 해체 및 상업자본가의 형성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일제 강점기로, 이 시기 중앙권력에 저항하는 3.1 운동과 같은 전국적 저항이 일어났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 셋째, 해방 직후 시기로, 각종 사회단체가 설립된 점을 강조한다. 넷째, 1960년대로, 4월혁명을 통해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이 본격화된 점을 든다. 다섯째, 1980년대로, 6월민주항쟁과 같이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획득했다는 점을 제시한다.

시민사회는, 일반적으로 근대 국가와 이를 견제하는, 권리를 가진 주체적 개인과 집단을 전제하므로 조선 시대나 일제강점기를 시민사회가 형성된 시기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우리의 과거를 시민이 부재한 역사로 단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선은 초기부터 공론을 통해 정치체제를 강화시켜왔고 이미 15세기에 지배 권력의 이념에 반하는 사상과 이념이 생겨났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인간 평등을 주장했으며 여성과 어린이 등 약자에 대한 배려와, 자연과 사물도 공경해야 한다는, 시대를 앞선 생태주의적 사상이 엿보인다. 또한 접·포 등 자율적 조직을 전국적으로 만들어 사상 뿐 아니라 조직적 측면에서도 현대 시민사회 못지않은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저자가, 천도교가 중심이 되어 3.1운동이 전개되었음을 강조한 것을 주목하

고자 한다. 천도교의 전신인 동학이 민주시민의 산실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방정환은 천도교 3대 교주 손병희의 사위로, 일찍이 천도교를 접했기에 어린이 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어린이의 권리를 주장한 운동은 세계사적으로도 한국이 가장 앞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권리 의식이 바탕이 되어 어린이들이 일찍 각성하여 각종 소년단체가 생겨났고 이후 4월혁명에서도 어린이의 활약은 돋보였다.

3.1운동을 전후하여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정치사회도 활발했다. 저자는 식민통치가 군사독재였던 것과 한국인의 자치공간에서는 민주주의가 작동했던 것을 부각시켰는데 이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 시기 세워진 많은 단체들의 규정과 운영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독립운동 기간 중 여러 당과 단체의 설립을 ‘난립’으로 보면서 독립운동 세력간의 분열로만 보는 것은 조선시대 봉당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 역사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당제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듯, 임정을 둘러싸고 여러 정당들이 여당이나 야당을 자처하면서 등장한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존재를 증명한 것이다. 국가-사회 모델을 시민사회-정치사회-국가로 삼분화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는 식민지 기간 동안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정치사회도 활발히 작동되었던 것이다.

2. 다양한 주체의 활약

본 발표문의 강점 중 하나는 민주시민으로 활약한 다양한 주체를 부각시킨 점이다. 특히 여학생 등 여성의 주체적 참여를 강조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여성의 활약은 실로 눈부셨다. 이미 동학농민혁명 시기에도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나 여성 지도자가 있었으며 3.1운동 당시에 여성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여성 중에도 유관순 등 특정 인물만 강조되어 김마리아 등 다른 중요한 인물들이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은 점을 지적한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나마 유관순의 독립운동을 설명할 때조차도 효라는 전통 가치에 기반하여 평가하는 것은, 저자도 지적했듯이, 기존 시각의 한계로 여겨진다. 3.1운동에 참여한 여학생을 묘사할 때도 이들이 감격의 울음을 터뜨렸다는 등 여성성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오늘날 촛불혁명에서도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들의 참여가 모성애의 발로라고 설명되기도 했다. 물론 모성애도 있었겠지만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 동기가 가족애에 국한된 지극히 사적인 것만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유모차부대의 출현은 불순세력의 개입을 주장하는 수구세력의 공격에 대해, 가장 순수한 존재의 참여라는 것을 보이하고자 한 의지로 생각된다.

여성의 참여는 3.1운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남성들의 활약에 비해 조명을 받지 못했다. 여성 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약자도 대학생, 지식인 등 엘리트에 비해 관심을 덜 받았다. 대체로 모든 민주항쟁이 민중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저자는 이러한 점을 발표문에서 잘 부각시키고 있다.

3. 다양한 운동 방식

본 발표문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변호사의 변호를 통한 투쟁은 그동안 무장투쟁에 비해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사실 이들의 실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온건해보이지만 자신의 생존을 지키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양한 방식의 투쟁도 이처럼 관심을 받았으면 한다.

비폭력은 평화를 지향한다는 면에서 그 자체로도 물론 가치가 있지만 효과적인 투쟁 수단이란 점에서 전략적 가치도 있다. 비폭력은 세계 여론에 호소할 수 있고 많은 다양한 계층으로부터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으며 비교적 온건한 중도파도 끌어들이 수 있다.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지난 50년간 비폭력적 투쟁이 더 성공 확률이 높고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물리력이 행사되는 계기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거나 방어의 필요가 있거나 응징의 성격을 띤 것이다. 여러 종류의 물리력을 폭력으로 단순화해서는 곤란하며 좀 더 미세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테러, 보복, 처벌, 회복적 정의, 저항, 수동성을 구분한 슈라이버 2세의 이론을 참고할 만하다. 그의 통찰력 있는 지적은 ‘무행동은 테러만큼이나 무법적 행위’라고 한 점이다. 테러가 권력자의 무질서라면 수동성은 권력이 없는 자들의 무질서라고 보았다. 즉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테러만큼이나 무법적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3.1운동 과정에서 주재소, 관공서, 친일파의 집 등을 부순 행위는 테러와 수동성 사이에 있는 ‘처벌’ 등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이 행위는 오히려 무법적 행위를 벗어나는 행위인 것이다. 3.1운동은 일제가 우리를 강점했다하여 우리도 일본을 강점하자고 한 것이 아니므로 보복이 아니며 과거 우리가 가졌던 독립을 되찾겠다고 한 것이므로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민주주의 100년의 혁명〉(발간 예정) 참조).

발제

3) 3·1정신과 평화

발제 신주백 교수(한림대)

토론 조성환 책임연구원(원불교사상연구원)



3·1정신과 평화

신주백 교수(한림대)

1. 들어가는 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1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이벤트가 진행중이다. 학술회의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까지 염두에 둔다면 통계를 내기에도 힘들 정도로 많이 열리고 있다. 매우 거칠게 인상기의 하나를 말하라면, 사실 2016년경까지도 3·1운동과 연관 지어 거의 다루지 않았던 주제인 여성, 평화, 기억의 측면에서 3·1운동을 이해하려는 글이 여러 편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오늘 발표자도 ‘평화’라는 주제에 순가락 하나를 올려놓겠다.

한국사회에 서구에서 말하는 peace가 ‘국가 간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에서 ‘평화’로 번역되며 들어온 때는 1890년대 즈음이었다. 이후 평화라는 개념이 담아내고 있는 함의가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었는지를 분석한 선행 연구가 여러 편 있었다.¹⁾ 발표자도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3·1운동과 민족운동 세력의 평화인식을 점검해 보겠다. 이때 민족운동 세력의 평화인식을 더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 당시 일본 지배자가 품고 있던 평화인식을 끌어들이며 대비하는 접근법도 시도하겠다. 더 나아가 여기에서 도출된 함의를 토대로 현재와 새로운 미래의 평화에 대해 언급해 보겠다.

민족운동 세력의 평화인식은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바뀐다. 더구나 3·1운동 이후 민족운동 세력이 크게 보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로 분화해갔다. 따라서 발표문도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거칠게나마 정리해 보겠다.²⁾

1) 장인성, 「근대 한국의 평화 관념—‘동양평화’의 이상과 현실」, 와타나베 히로시·박충석 공편, 『한국·일본·서양』, 아연출판부, 2008; 하영선, 「근대한국의 평화 개념 도입사」, 하영선 외,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개념 형성사』, 창작과비평사, 2009; 허수, 「20세기초 평화론」, 『역사비평』 106, 2014.

2) 분화된 후 사회주의 계열의 평화관에 관해서는 오늘 발표문에서 분석하지 않겠다. 차후 보완할 때 연속과 변용의 측면에서 접근하며 분석하겠다.

2. 사회진화론을 극복한 평화론으로 동양평화론

3·1운동 시점에 발표된 선언문에서 말하는 ‘평화’는 기본적으로 ‘동양’이란 말과 함께 짝을 이루며 전개되었다. 달리 말하면 평화라는 용어가 독립된 자기 맥락을 갖고 담론 공간을 형성하지 않고 항상 동양과 붙어서 말해졌다. 세계라는 말과 하나 되어 ‘세계평화’라는 말로 곧장 연결되지도 않았다.

동양평화라는 언어, 특히 3·1운동 당시 민족운동 세력이 말하는 조선민족이 독립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동원된 동양평화론의 역사적 시발점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었다. 그의 동양평화론은 하영선이 분류한 용어를 빌리자면 양절체제론 또는 자강균세론의 평화론이 아니었다. 따라서 매우 많은 선행연구가 있지만,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발표자 나름대로 설명해 보겠다.

‘평화’라는 말이 민족운동 세력 사이에서 저항의 매개로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安重根의 동양평화론일 것이다. 안중근은 동양평화를 견고히 하기 위해 일본이 나서서 旅順을 군항으로 개발하고 이것을 3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이곳에서 3국 대표로 구성된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더 나아가 동양평화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3국이 공동으로 은행을 설립하고 공용 화폐를 발행하며, 3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을 방문하여 협력을 맹세하고 왕관을 받아 세계 민중의 신용까지도 획득하자는 입장 또한 갖고 있었다.

안중근은 검찰신문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15가지 이유를 말하였다. 그중 열네 번째로 동양평화를 깨뜨린 죄를 들었다. 안중근은 동양의 각국이 독립하여 존재하면 동양의 평화가 있으며, “동양의 일국(一國)이 자주독립할 수 없다면 동양평화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일본은 한국의 “자립 독립”을 보호하는 것이 동양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일본이 한국을 병탄시킬 의사가 있었다”. 더구나 미국과 영국 등 열강은 일본이 약해진 후 동양 전체를 점령할 생각으로 일본의 조선침략을 “묵시(默視)”하고 있었다. 그래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정책에 따른다면 일본과 한국 모두 공멸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 일본인조차 조금이라고 자각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의 동양평화론은 일본의 리더십을 어느 정도 인정한 위에 독립적이면서도 동등한 3국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현실 속에서 정착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제시한 선구적 의견이었다.

이처럼 안중근식 동양평화관은 조선의 독립과 자주적 연대가 동양평화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입장이었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감옥에서 독창적으로 정립되었다기보다 1909년의 시점, 달리 말하면 호남의병을 제외하면 의병운동의 조직적 전개가 무너진 상황, 그리고 일본정부가 ‘적당한 과정’을 거쳐 한국을 병합하기로 한 현실 진단에 바탕을 두고 저항의지, 독립의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지점이었다. 그 단적인 보기가 미주지역 민족운동 단체인 대한인국민회가 자신의 기관지 『신한민보』에서 이등박문의 ‘극동평화’관을 비판한 지점을 들 수 있다.

대한인국민회는 1909년 8월 19일 이등박문이 말하기를, 일본이 극동평화를 교란시키지 않고 조선이 “완전히 일본이 되어 한 집과 같으니 그 국력이 원래 극동평화를 교란케 할 자격이 없을 뿐”이라고 발언한 지점을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어 비판하였다.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동양 삼국의 권리가 균등한 연후에야 될지니 일본이 한국을 능압하며 청국을 침략하면서 어찌 평화를 말하나뇨 조선 국민은 나의 나라이 멸망한 후에 동양이 있음을 원치 아니하나니.....³⁾

이렇듯 대한제국, 청, 일본이 독립되고 동등한 주권을 가져야 동양평화가 보장된다는 대한 국민회의 인식은 안중근에게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회진화론에서 탈각한 동양평화론은 여전히 ‘弱肉強食 興廢無常’에 입각해 있는 이등박문식 동양평화관, 곧 조선을 일본에 종속화시켜야만 동양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일본식 동양 평화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일찍이 1905년 11월 15일 이등박문은 고종황제를 알현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동양평화관을 다음과 같이 드러냈다.

그 戰勝의 결과 貴國의 領土를 보전한 것은 사실이 증명하는 바이고 또한 天下의 公論이 모두 인정하는 바로 (중략) 한국의 영토는 이로 인해 보전될 수 있었고 동양평화는 이제 극복되었다.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아가 平和를 恒久히 유지하고 東亞將來의 滋端을 杜絶하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결합을 일층 견고히 하는 것이 극히 긴요하다고 인정된다.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시점에는 조선의 독립이 동양평화의 관건이라더니, 전쟁 끝난 후부터는 한일이 하나 되어야, 달리 말하면 조선이 일본에 종속되어야 동양평화가 보장된다는 논리였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병합의 첫 번째 명분으로 한·일 공동운명론에 이어 ‘지상명령’이라며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확보’하는 일을 내세웠다. 결국 대한인국민회나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은 이러한 논리와 확연히 반대되는 대치점에 위치한 평화인식이고 실천논리였다.

이제부터 민족운동 세력과 일본 지배집단의 대비된 동양평화론은 제국과 식민의 관계로 재편된 전개되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민족운동 세력이 제기한 동양평화론은 일본 지배집단과 더욱 선명한 경계선이 그어졌다. 이제 3·1운동 시기 여러 ‘선언서’에서 등장하는 공통된 내용을 확인해 보자.

3) 『新韓民報』, 1909.9.15.

4) 金正明 編, 「伊藤特派大使內謁見始末」, 『日韓外交資料集成: 日韓併合編』 6 上, 巖南堂書店, 1964, 23쪽.

3. 3·1운동 때 발표된 선언서들이 말하는 독립과 평화

동양평화의 전제가 각국의 주권이 인정되는 상태, 곧 한국의 독립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안중근의 발상, 대한인국민회의 인식은 이후 민족운동가들이 공유하는 기본 원칙이었다. 때문에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의 행위는 동양평화를 가로막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1919년의 2·8독립선언은 동양평화와 조선의 독립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最後에 東洋平和의 見地로 보건대 그 威脅者이던 俄國은 이의 軍國主義의 野心을 拋棄하고 正義와 自由와 博愛를 基礎로한 新國家를 建設하락 하는 中이며 中華民國도 亦然하며 兼하여 此次 國際聯盟이 實現되면 다시 軍國主義의 侵略을 敢行할 強國이 無할 것이라. 그러할진대 韓國을 合併한 最大理由가 이미 消滅되얏을 뿐더러 徒比로 朝鮮民族이 無數한 革命亂을 起한다 하면 日本의 合併된 朝鮮은 反하여 東洋平和를 攪亂할 禍源이 될지라. 吾族은 正當한 方法으로 吾族의 自由를 追求할지나 萬一 此로써 成功치 못하면 吾族은 生存의 權利를 爲하여 온갖 自由行動을 取하여 最後의 一人까지 自由를 爲하는 熱血을 濺할지니 어찌 東洋平和의 禍源이 아니리오. 吾族은 一兵이 無호라. 吾族은 兵力으로써 日本을 抵抗할 實力이 無호러. 然하나 日本이 萬一 吾族의 正當한 要求에서 不應할진대 吾族은 日本에 對하여 永遠의 血戰을 宣하리라.⁵⁾

(굵은 글씨는 발표자)

식민지 조선이 동양평화를 교란시키는 ‘화근’이라는 관점을 드러냄으로써 독립을 정당화하는 논거를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은 「3·1독립선언서」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발표된 여러 독립선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1독립선언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처음부터 이 거래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닌 두 나라의 합병의 결과는 마침내 억압으로 이뤄진 당장의 평안함과, 차별에서 오는 고르지 못함과 거짓된 통계숫자 때문에, 이해가 서로 엇갈린 두 민족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도량이 날이 갈수록 깊이 패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라. 용감하게 옛 잘못을 고쳐 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시대를 마련하는 것이, 서로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인 것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울분과 원한이 쌓이고 쌓인 이천만 국민을, 힘으로 붙잡아 묶어 둔다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노릇이 아닐 뿐 아니라, **동양 전체가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운을 초래할 것이 뻔한 터에, 오늘 우리의 한국 독립은**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과 번영을 이루게

5) https://search.i815.or.kr/Search/TotalSearch.jsp?sT=3&tid=&v_allword=%EB%8F%99%EC%96%91%ED%8F%89%ED%99%94. 독립기념관의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 벗어나, 동양을 버티고 나갈 이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는 것이다.⁶⁾ (굵은 글씨는 발표자)

이처럼 3·1독립선언은 조선의 독립이 동양평화의 전제라는 것이다. 독립을 전제한, 내지는 독립에 찬동한 국가들간의 동등한 연대를 통해 세계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 문제, 곧 독립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극동문제, 곧 동양평화를 유지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은 대한국민회의의 독립선언서(1919.3.20.), 한성정부의 국민대회취지서(1919.4)에서도 확인된다. 만세시위도 끝나고, 파리강화회의도 끝난 이후인 1919년 7월 만해 한용운이 감옥에서 집필했다는 ‘조선독립의 서’에서도 같은 논리가 확인된다.

그런데 한용운은 동양평화론을 말하면서 더 나아가는 논리를 한 가지 추가한다. 그는 일본의 침략주의와 조선 독립을 부인하는 행위는 평화를 교란하는 행위라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미국과 일본 또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적인 연합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⁷⁾ 미일전쟁, 중일전쟁을 예측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반일연합세력 대 일본 사이의 전쟁까지 말하고 있는 현실인식은, 한용운이 매우 탁월한 정세감각의 소유자였음을 말해준다. 결론론적이지만 그의 예단은 틀리지 않았음을 이후 역사가 보여주기 때문이다.

선언과 분석에 그치지 않고 특정한 규정으로까지 나아간 경우도 있었다. 상해 임시의정원이 4월 11일에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의 선포문, 선언서, 정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상해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선포하면서 임시헌장 등 정부로서의 형식과 제도에 대한 기본 골격을 갖추었다.⁸⁾ 이때 「선포문」에서 3·1운동이 ‘평화적 독립’을 향한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임시헌장 제7조에서 “大韓民國은 神의 意思에 依하여 建國한 精神을 世界에 發揮하며 進하여 人類의 文化及 平和에 貢獻하기 爲하여 國際聯盟에 加入함”이라 밝혔다. 평화적 독립을 이룩한 이후에는 “民族 平等, 國家 平等 及 人類 平等의 大義”를 지향할 것을 선언하겠다고 「정강」의 첫 조항에서 밝혔다. 상해의 임시정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획득한 이후 국가간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평화를 주장한 것이다.⁹⁾

상해 임시정부의 선언은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해 열리고 있던 파리강화회의의 기본 기조에 맞는 주장이었다. 월슨 미국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 싸우고자, 자신의 생활양

6) https://search.i815.or.kr/Search/TotalSearch.jsp?sT=3&tid=&v_allword=%EB%8F%99%EC%96%91%ED%8F%89%ED%99%94. 독립기념관의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7) 『新天地』 14, 1947.3·4.

8)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j_001_0010_00010 2017.2.24. 검색.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9) 이미 다른 기회에 밝혔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균등, 동등을 의미한다.

식을 선택할 권리를 갖고자, 전쟁에 개입하겠다고 참전교서에서 밝혔다. 평화를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참전한 미국이 주도한 전후 처리의 기본 방향은 민족자결주의였다. 민족자결주의의 최대 적은 주축국의 독일이었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독일의 정체는 해체되어야만 하였다. 독일에서 군주체제가 무너지고, 동유럽의 독립국가들이 공화정체로 독립한 흐름은 이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상해 임시의정원의 규정과 제도도 마찬가지였다.

4. 독립전쟁을 말하는 시기의 전쟁과 평화

1920년 1월 임시정부 신년회에서 도산 안창호는 ‘금년이 독립전쟁의 원년’의 해라고 말하였다. 실제 임시정부는 외교론에 입각하여 민족운동 노선을 실천하는 한편에서도, 파리강화회의가 기대와 달리 끝난 이후 독립전쟁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만주지역 독립군 단체의 통합을 위해 안정근 등을 동만주에 파견하고, 여기에 호응하여 독립군 조직은 통일과 재편을 논의하였다. 봉오동전투에서 승리한 독립군 스스로도 이 전투를 ‘독립전쟁 제1회전’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렇다면 독립전쟁을 말하는 시기 민족운동가는 평화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3·1운동의 정신을 어떻게 수렴하였을까? 임시정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안창호가 독립전쟁을 말했던 그 시점, 곧 1920년 1월의 시점에 민족운동 세력은 다음과 같은 정세인식을 갖고 있었다.

獨立의 完成이 었지 容易하리오. 만흔 努力과 만흔 生命을 費하지 아니하고 었지되리요. 獨立運動의 第一期가 겨우 지나가고 將次 第二期가 오려 하나니 이 第二期야말로 우리 獨立運動의 本論이오 中心이라. 이미 平和運動의 時機가 過하고 血戰의 時機가 到하였나니 이 時期의 期間은 第一期보다 길 것과 그 困難과 犧牲은 더욱 巨大할 것과 따라서 이 時機에 우리 國民의 發하여야 할 愛國의 熱誠과 勇氣와 忍耐는 더욱 倍加하여야 할지니 한갓 一時의 自慰를 爲하여 獨立運動을 容易하고 簡單한 것으로 알지 말나.¹⁰⁾ (굵은 글씨는 발표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다. 하나는 평화운동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이다. 작자 미상의 지은이가 말하는 ‘평화운동’이란 독립된 아젠다로서의 평화에 관한 이슈가 아니었다. 동맹과 업처럼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투쟁에 정치투쟁의 성격까지 가미된, 그러면서도 총을 들고 싸우지 않는 투쟁이었다.¹¹⁾ 이 지은이에게는 만세시위와 같은 정치적 시위도 평화운동의 하나였다.¹²⁾ 1919년은 평화운동기였던 것이다.

10) 「本國同胞여」, 『獨立新聞』, 1920.1.31.

11) 「國民皆兵의 第一聲」, 『獨立新聞』, 1920.3.23.

12) 「政治的 罷工」, 『獨立新聞』, 1920.4.24.

다른 하나는 정세인식이다. 작자 미상의 지은이가 말하는 혈전의 시기란, 국제정세가 전후 처리에 관해 논의하는 시점과 맞물려 세계평화의 문제에 관한 논의가 크게 확산되는 시기로부터 일본과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는 독립전쟁을 해야 할 시기로 옮겨가고 있는 시기였다. 그러면서 작자 미상의 지은이는 우리 국민이 ‘獨立 아니면 死’라는 결심만 확고하면 독립이 “오직 今年이나 明年事임을 確信할지어다”며 “대개 금후의 독립운동은 오직 血戰뿐”이라고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낙관적인 정세 전망을 제시하였다.

평화와 혈전을 대치시키는 표현 방식은 그때까지의 평화관인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 평화라는 관점을 전제한 결과이다. 또 그때까지 평화에 관해 언급한 민족운동 세력의 일반적인 시선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런데 이즈음 여기에 또 다른 관점이 하나 추가된다. 평화와 평등을 연계시키는 접근이 바로 그것이다.

大韓民國臨時政府에서 발행한 『獨立新聞』에서 朴健秉은, “平和의 字解를 보건대 平은 平이요 和는 均이오 均은 等이니 平和는 平等으로 代入할 수” 있다고 하여 평등과 평화를 서로 대체 가능한 가치로 보았다. 그러면서 “평화의 요소는 平等이니 氣不平則有聲하고 水不平則流動 하나니 인간에 평등이 無하면 爭鬭가 起하오”라고 평등이 무너져 투쟁사회가 되면 평화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계급’, ‘장벽’, 그리고 ‘절대박애’와 함께 ‘평화에 대한 각오’를 ‘절대 평등’에 이르는 네 번째 요건으로 제시하였다.¹³⁾ 그러면서 박건병은 독립과 평화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四. 平和에 對한 覺悟, 或者는 平和를 上이라 하고 獨立을 次이라 하며 或者는 平和와 獨立을 가치 치며 或者는 獨立을 上이라 하고 平和를 次이라 하나 **獨立지 못한 者에게는 平和가 업소**¹⁴⁾ (굵은 글씨는 발표자)

이처럼 朴健秉은 평화와 독립의 관계를 상하관계라기보다 先後關係로, 그리고 必要充分關係로 이해하였다. 그때까지 민족운동 세력이 생각하고 있던 평화과정, 곧 독립이 전제된 평화를 말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평화라는 과정을 그는 국가간 또는 개인간 평등을 실현하는 길, 곧 독립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았다. 박건병의 주장은 상해 임시의정원이 제정한 임시헌장에서 ‘민주 + 공화’를 붙여 ‘민주공화제’라 말하고, 선포문, 선언문, 정강에서 ‘평등’이란 단어가 네 차례 등장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¹⁵⁾ ‘한국적 평화관’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13) 당시 강원도를 대표하는 臨時議政院의 議員으로 활동하고 있던 그가 上海의 民團에서 강연한 내용을 소개한 기사이다.

14) 朴健秉, 「나의 平和觀」, 『獨立新聞』, 1920.1.8.

15) 이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기술하겠다.

그러나 민족운동 세력은 자신의 말과 달리 독립전쟁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한반도 주변에서 반일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아 대외정세를 활용할 기회도 없었다. ‘혈전’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평화운동의 시기도 혈전의 시기도 아닌 어떤 시기가, 1920년 1월의 시점에 임시정부와 그 주변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달리 말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규정한 고전적인 평화관에서 보자면, 뭐라고 말로 정의하기 어려운 평화가 상대적으로 긴 시간 유통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의 현실은 식민의 연속일 뿐이었다. 결국 남는 문제는 다시 ‘독립’문제였다. 평화에 관한 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기회는 열린 공간이 형성되지 못하여 금방 드러나지 않았다. 명목상의 평화론만 회자될 뿐이었다.

5. 전쟁 없는 평화라는 평화관의 지속과 21세기 한반도

그러나 1920년 이후, 곧 독립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비록 명목상의 평화론이지만 평화에 관한 갈증은 사라질 수 없었다. ‘독립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 갈망하고 상상하며 누군가에게 호소하고 주장할 수 있는 슬로건으로 평화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이때의 평화란 여전히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였다. 비록 명목상의 평화였고, 슬로건으로서의 평화였지만, 민족운동 세력이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자주 독립, 곧 독립전쟁을 통한 독립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인 1944년에도 인류의 정의와 세계의 영구 평화를 위해 동맹국, 그리고 전 세계 절반의 ‘반침략 인민대중’과 함께 침략세력에 대항하여 공동으로 싸우겠다고 하면서도 그 전제는 “자주 독립의 입장과 민족 평등의 합작 원칙”이었다.¹⁶⁾ 대한인국민회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서 말하는 평화관을 계승하고 있었던 것이다.

평화를 향한 임시정부의 평화관과 전제는 1945년 이후 한국현대사, 곧 분단의 역사에서 변용된 형태로 다시 작동하였다. 분단 현실에서 ‘평화’는 남북한 긴장관계의 해소를 의미했지만, 대중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소재는 아니었다. 대중이 그것을 말하는 순간 삐딱한 시선에 작동하였다. ‘평화’는 곧 통일문제였고, 북한의 평화공세의 한 축이었기 때문이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은 이러한 시선에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였다. 주지하듯이 7·4남북공동성명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통일의 3대원칙으로 명시하였다. 이때부터 평화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는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의 평화는 남북통일문제와 연관된 언어였을 뿐이다. 더구나 이때는 정부가 곧

16)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828&itemId=ij&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36&levelId=ij_008_0050_00240 2019. 2.16. 「국내외 동포에게 고향(1944. 5.)」

국가라는 관념 아래 정권안보를 국가안보와 동일시하였다. 달리 말하면 극한적인 남북대치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정권이 평화를 지키는 주체였지 민간인이나 시민사회가 주체는 아니었다. 따라서 평화라는 독립된 가치를 내세우며 평화운동이란 독자의 영역을 개척하려는 행동 자체는 정권안보 곧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언행으로 간주되는 시대였다.

민주화운동 세력은 남북대화와 7·4남북공동성명의 3대원칙을 환영했지만 유신정권에 이용될 수 있는 또 다른 현실을 우려하였다. 민주화운동 세력의 다수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된 민족으로 정의가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스런 나라”를 수립하자는 선민주 후통일을 주장하였다.¹⁷⁾

군사독재와 싸우던 1980년대까지도 안보와 평화통일 내지는 민주와 평화통일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구도는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개인의 독립된 인권을 제도화하고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시기였으므로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말하기도 힘들었다. 때문에 통일논의와 독립된 평화담론이 설 자리는 거의 없었다. 냉전체제와 남북대결의 분단체제 하에서 한국사회의 주류적 평화담론은 정부가 독점하고 군사적 대결구도를 전제로 해서만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대화를 계기로 보통 사람도 공공 영역에서 조심스럽지만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말할 수 있게 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것이 쟁취된 결과물이었다기보다는 데탕트라는 말로 압축되는 양극화에서 다극화로 국제정세가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추동된 결과, 달리 말하면 外因이 결정적 요인이었지만, 1972년 이후 공공 영역에서 평화라는 말의 유통이 확산되는 과정은 민주화운동의 성장과정과 맞물려 있었다. 안팎이 맞물려 처음 폭발한 때가 1987년 6·10민주화운동 이후의 움직임이었다. 냉전에 기반을 둔 독재정권이 평화담론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7년 이후 평화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움직임은 통일운동, 반미운동에 포섭된 측면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때문에 평화와 안보를 동일시해 왔던 시대에 안보의 주류였던 정권의 지배 담론과 반공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없었다. 지금도 여전히 평화운동은 통일운동과 구분되어 독립된 아젠다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달리 말하면 1945년 이전까지만 해도 식민이란 절대조건으로부터 출발한 독립과 연동하여 사고했듯이, 21세기 한국에서 평화는 냉전체제의 산물인 분단체제라는 절대조건으로부터 출발해 그것의 극복과 연동해 사고하며 풀어갈 수밖에 없다. 발표문과 연관 지어 이를 말한다면, 역사적 자산을 현재의 구체적인 현실과 연동지어 발전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우리의 역사적 자산은 자주와 독립 그리고 주권의 평등과 배타성이다. 이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국제관계의 기본원리이다. 여기에 ‘지역’이란 프레임을 포함시켜 ‘질서’를 만들어간다는 전략을 입히면, 21세기에 3·1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다. 지역과 질서를 연결하는 매개는 국가이익일 수도 있지

17) 「民主救國宣言(1976.3.1)」

만, 그것만으로는 지역과 질서를 엮어 제도로 정착시킬 수 없다. 지역의 안정과 협력의 다른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평화라는 맥락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과 질서를 엮어 제도화하는 과정까지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일 수밖에 없는데, 그 지속의 힘의 원천도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지역과 질서를 입히려는 이유는 한반도의 분단이 내적 장애 요인에 의해 형성된 불행이 아니라 세계, 지역 차원의 국제정치 요인이 더 결정적으로 작동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분단극복이란 관점보다 평화프로세스라는 관점이 더 호소력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0세기 한국의 평화관의 전개

조성환 책임연구원(원불교사상연구원)

저는 철학을 전공하였고 주로 사상을 분석하고 있어서 삼일운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나 역사적 사실에는 무지한 편입니다. 혹시 저의 논평에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대별 평화론의 전개

먼저 논문에서 다루는 시간적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글의 제목을 「20세기 한국의 평화관의 전개 - 삼일운동전후 민족운동세력의 평화인식을 중심으로」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1945년 이전까지는 ‘독립평화론,’ 1945년 이후부터는 ‘통일평화론’과 같이. 그리고 이 시기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더 세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09년: 동양평화론(안중근, 『신한민보』)

1920년: 명목평화론(?)

1945년: 분단평화론(?)

1972년: 안보평화론(정부)

1987년: 통일평화론(민주화)

2018년: 평화통일론(“분단극복이라는 관점보다 평화프로세스라는 관점이 더 호소력 있다”)

2. 진화론에서 평화론으로

발표자께서는 동양평화론을 “사회진화론에서 탈각한 동양평화론”이라고 자리매김하고 계시는데, 이 지적은 20세기 초의 한국인들이 서양에서 들어온 ‘진화론’을 ‘평화론’으로 전환시

키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이 진화론적 논리로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고자 한 이등박문식의 ‘진화론적 평화론?’(엄밀한 표현은 아닙니다만)과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1916년의 불법연구회(원불교의 전신)에서는 “강자와 약자의 진화상 요법”을 말하고, 1920~30년에 천도교 이론가인 이돈화는 『신인철학』에서 서양의 “과학주의 진화론”과 대비되는 “수운주의 진화론”(=동학적 진화론)을 설파하는데, 이런 것도 서양의 진화론을 한국인의 입장에서 수용 내지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한국적 진화론”의 배경에는 평화사상도 깔려있다는 점에서 안중근의 평화론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개벽종교의 평화론

마지막으로 삼일운동의 사상적 배경에 관해서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는 것으로 논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번역어로서의 ‘평화’ 개념을 중심으로 삼일운동 전후의 평화론을 분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유를 들면 당시 한국인의 종교론을 번역어로서의 ‘종교’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당시의 ‘종교’ 개념은 서양 ‘religion’의 영향도 있지만,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교’(Teaching) 개념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¹⁾ 그래서 당시의 일본정부가 ‘신도’와 ‘불교’와 ‘기독교’의 세 가지만 정식종교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유사종교라고 한 분류는 전통시대에 동아시아에서 유교, 불교, 도교의 삼교(三敎)만 정식 ‘교’(성인의 가르침)로 인정한 틀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즉 당시의 일본은 서양의 ‘religion’ 개념을 수용해서 ‘신교의 자유’를 인정했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삼교의 틀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한국인들은 서구적 ‘평화’ 개념이 들어오기 이전에 동아시아적인 유사 개념의 틀로 그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학의 슬로건이었던 ‘보국안민(輔國安民)’의 ‘安’ 개념은 서양의 ‘peace’ 개념과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학의 ‘제폭구민(除暴救民)’이라는 슬로건 역시 ‘폭력을 제거한다’(除暴)는 점에서는 ‘peace’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동학이나 천도교에서는 제폭이나 안민에 이르는 방법을 ‘도덕(道德)’이라고 하였습니다(최시형의 『해월신사법설』에 나오는 ‘도덕문명’ 개념이나 손병희의 「삼전론」에 나오는 ‘도전(道戰)’ 등). 그리고 이 때의 ‘도덕’은 지금으로 말하면 ‘생명평화’에 상응합니다.

1) 조성환, 「중국적 사상형태로서의 敎敎」, 『철학사상』 11·12(2007) 참고.

그래서 이들은 “평화적 수단(=도덕)에 의해서 평화를 달성한다(=도덕)”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동학농민군의 규율에서는 “살생을 하지 않는다”나 「삼일독립선언서」에서 “위력(=폭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도덕)의 시대가 온다”는 도덕관, 평화주의, 전환의식 등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선천에서 후천으로의 시대전환의식은 개벽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987년에 “안팎이 맞물려” 평화담론이 확산되었듯이, 1919년의 삼일운동도 밖으로는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안으로는 천도교 등의 도덕평화주의가 “안팎이 맞물려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²⁾

2) 조성환, 〈개벽사상으로 다시 읽는 「독립선언서」〉, 《개벽신문》 79호, 2018년 11월.

memo